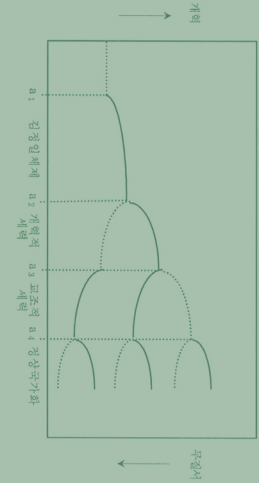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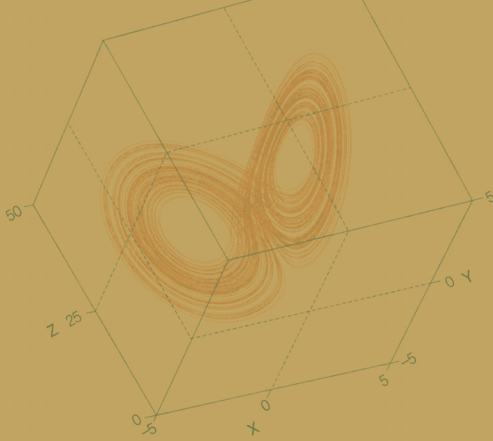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 전현준 · 조정아 · 민병원 · 정규섭 외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www.kinu.or.kr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인 쇠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길 275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76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디자인 양동문화사 (02-2272-1767)

인 쇠 처 두일디자인 (02-2285-0936)

가 격 7,000원

ISBN 978-89-8479-574-7 93340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통일연구원
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통일연구원
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이 교 덕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전 현 준 선임연구위원 조 정 아 선임연구위원 민 병 원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정 규 섭 교수(관동대) 외
	통일연구원	전 현 준 선임연구위원	김 국 신 선임연구위원 김 갑 식 입법조사원(국회 입법조사처)
협력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조 정 아 선임연구위원	김 영 윤 선임연구위원 박 영 자 연구교수(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민 병 원 교수	조 동 준 교수(서울시립대) 김 치 욱 연구위원(세종연구소)

목차

C o n t e n t s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전현준, 조정아, 민병원, 정규섭 외

제1장 서론

- | | |
|------------------------------|---|
| 1. 연구의 배경 | 2 |
| 2. 연구 목적과 제1차년도 연구성과 | 4 |
| 3. 2010년(2차년도) 연구의 내용 및 추진과정 | 8 |

제2장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 | | |
|----------------------|----|
| 1. 머리말 | 12 |
| 2. 북한 정치의 비정상적 특성 | 17 |
| 3. 북한 정치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 27 |

제3장 북한 시장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 | | |
|-------------------------------|----|
| 1. 머리말 | 40 |
| 2. 정상국가화 과정으로서의 시장화와 체제전환 | 44 |
| 3. 북한 시장의 진화경로 | 47 |
| 4. 복잡계 모형을 활용한 북한 시장 진화 시뮬레이션 | 53 |
| 5. 시장 확산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 69 |

제 4장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 | | |
|------------------------|----|
| 1. 머리말 | 74 |
| 2. 불량국가의 군사적 측면 | 76 |
| 3. 비정상국가의 정치경제 | 87 |
| 4. 국제사회의 지원과 북한에 대한 함의 | 92 |

제 5장 **결론: 정책적 고려사항 / 98**

참고문헌 / 101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19

〈표 IV-1〉 테러 수출에 관여하는 불량국가	77
〈표 IV-2〉 핵무기 확산에 관여하는 불량국가 (1970년 이후)	78
〈표 IV-3〉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현역 군인수 차이	81
〈표 IV-4〉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군사비 차이	82
〈표 IV-5〉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민주주의 차이	82
〈표 IV-6〉 국제사회에서 기피국가로 언급된 국가들	83
〈표 IV-7〉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무력분쟁 관여 횟수 차이	85
〈표 IV-8〉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협력적 신호의 사례 및 차이	86
〈표 IV-9〉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갈등적 신호의 사례 및 차이	86
〈표 IV-10〉 국가 취약성의 주요 구성요소	88
〈표 IV-11〉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비정상국가의 유형과 리스트	90
〈표 IV-12〉 불량국가의 분화	93

<그림 Ⅰ-1> 협동연구의 대상 시스템	4
<그림 Ⅱ-1> 북한 정상국가화 과정	15
<그림 Ⅱ-2> 북한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16
<그림 Ⅱ-3> 북한 정치체제의 비정상화 체계도	18
<그림 Ⅲ-1> 북한시장의 진화: 복잡적응 경로	48
<그림 Ⅲ-2> 행위자간 상호작용	56
<그림 Ⅲ-3> 배급량 감소시 일인당 시장 교역량 (시나리오 Ⅰ)	58
<그림 Ⅲ-4> 배급량 감소시 일인당 식량 부족분 (시나리오 Ⅰ)	59
<그림 Ⅲ-5>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시 일인당 시장 교역량 (시나리오 Ⅱ)	61
<그림 Ⅲ-6>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시 일인당 식량 부족분 (시나리오 Ⅱ)	62
<그림 Ⅲ-7>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 후 재강화시 일인당 시장 교역량 (시나리오 Ⅲ)	63
<그림 Ⅲ-8>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 후 재강화시 식량 부족분 (시나리오 Ⅲ)	64
<그림 Ⅲ-9>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 후 재강화, 배급량 조정 시 일인당 시장 교역량 (시나리오 Ⅲ-2)	65
<그림 Ⅲ-10>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 후 재강화, 배급량 조정 시 식량 부족분 (시나리오 Ⅲ-2)	66
<그림 Ⅲ-11>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 후 재강화, 배급량 조정 시 아사자 비율 (시나리오 Ⅲ-2)	67
<그림 Ⅳ-1> 불량정권(정치학살을 자행하는 나라)의 추세	79
<그림 Ⅳ-2>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94

제1장

서론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 체제의 장래에 대해 조기 붕괴론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로는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대외적 위기와 함께, 심화되는 경제난과 유일한 후계자 김정일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 등이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수재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북한내에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고 탈북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현상은 북한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하였듯이 체제의 비정상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북한 체제는 ‘고장난 비행기’로 비유되고, 북한의 장래에 대해 ‘연착륙’이라는 관점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1994년 10월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1993년부터 야기된 핵위기를 수습하였다.

1998년 9월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하면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우리나라의 국력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최강의 경지에 올려 세우기 위한 거창한 애국애족의 위업”이라는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령도방식”이라는 ‘선군정치’를 표방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1998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우리는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고비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전진과 돌파구를 열어놓았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앞에는 의연히 커다란 경제적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경제난 해소에 어려움을 겪었다.

2001년 7월 9일자 Newsweek는 북한을 주민들이 자신들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위대한 지도자’를 숭배해야 하는 거대한 강제수용소이므로 최악의 국가 10개국 가운데 1위로 지목하였다. 2002년 1월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

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국가(failed state), 불량국가(rogue state)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예이다.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2006년 10월, 2009년 5월)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1998년 8월, 2006년 7월, 2009년 4월) 등을 통해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 조치’,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 11월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설치, 2003년 3월 종합시장 개설 등 일련의 위로부터의 부분적인 개혁과 통제된 경제개방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 박봉주 내각은 대폭적인 분권화와 시장요소 도입 등을 추진하였으나, 2005년부터 당이 반격에 나서 결국 2008년 6월 김정일 정권은 경제개혁적 조치에서 후퇴하였다. 2009년 11월 30일 실시된 화폐개혁은 시장의 통제와 계획의 복원을 목적으로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공급부족에 따른 물가폭등으로 주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되고 있다.

결국 김정일 정권은 2008년 이후 건강문제와 후계체제 구축문제 등으로 정치적으로 난제에 직면하는 동시에 경제난 해소에도 역부족인 상황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1월 9일자 『로동신문』 기명기사에 따르면 김정일이 지난시기 현지지도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사상적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군사면에서도 강국 지위에 올라섰다. 그러나 인민생활면에서는 걸린 것이 적지 않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 9월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화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정권이 공식출범한 이후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미국·일본 및 아시아국가들과 접촉 강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긴밀화, 대서방 접근 적극화, 남북정상회담, 중국·러시아·일본과의 정상회담, 유럽연합(EU)국가들과의 수교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2년 9월 일본인 납치인정과 10월 핵무기 개발 시인 등 ‘고백외교’는 이러한 성과를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김정일 정권은 핵문제에 미국과 갈등을 야기하고, 이를 협상수단으로 활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 확보와 경제·외교적 지원 도출을 도모하는 ‘갈등적 평등전략’을 전개하는 동시에, 특히 중국과의 관계긴밀화를 통한 ‘균형전략’이라는 생존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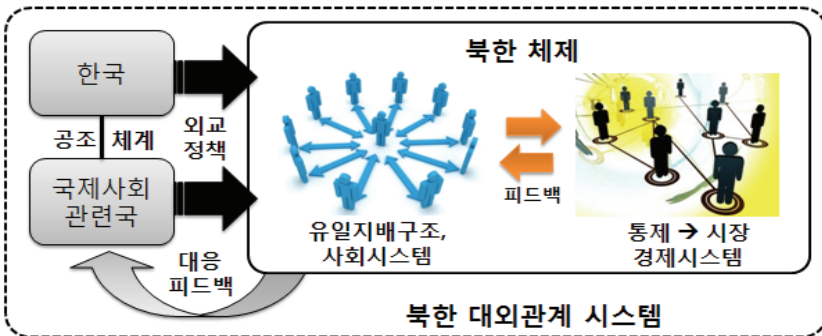
대남차원에서 북한은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결과 북한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산출한 이후 ‘민족공조전략’이라는 대남정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2008년 3월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강경한 입장의 강도를 높였으며, 2010년 3월 천안함 공격, 11월 연평도 포격이라는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였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국가임은 분명하다. 진정한 의미의 남북화해·협력과 통일에의 진입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작동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

2. 연구 목적과 제1차년도 연구성과

본 연구는 복잡계 이론(complex system theory)을 적용하여 북한 체제의 성격 및 변화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폐기하고 개혁·개방을 실시하여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년간의 연구기간을 목표로 한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협동연구사업 가운데 제2차년도 연구인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의 결과이다.

<그림 I-1> 협동연구의 대상 시스템



제1차년도 연구인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에서는 북한의 ①경제시스템, ②사회시스템, ③대외관계 시스템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으며, 그 결과 ①『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②『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③『탈냉전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라는 연구 결과를 산출하였다.

첫째,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를 복잡계 이론의 틀에서 재구성하고, 북한의 자생적 시장질서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복잡계 이론을 북한체제에 적용하는 연구틀로서 경제시스템 내부에서 하위 수준의 자기조직화 과정이 연쇄되어 시스템의 진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매크로-메조-마이크로의 3개 층위에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제시스템은 질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적 정합성과 시스템 재생산에 기여하게 하는 기능적 정합성이 유지될 때 존속할 수 있다. 이러한 정합성에 균열이 일어나면 경제시스템은 새로운 변화의 필요에 직면하게 되고, 여기서 제기되는 다양한 새로운 시도 가운데 정합성을 충족하는 것이 선별되어 자기조직화를 통해 기존 질서를 대체한다. 이러한 자기조직화의 연쇄가 중첩되어 경제시스템의 진화 동학이 구성된다.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1990년대를 기점으로 북한의 경제시스템이 정합성의 균열과 봉합을 반복하는 과정을 조망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기능적 정합성의 파정 상태에 거듭 봉착해왔다. 북한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민의 자구적인 시장화를 용인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정합성의 회복을 촉진시켰다고 평가된다. 이로 인해 경제시스템은 대폭 안정되었지만, 2008년부터 북한 당국은 주민의 시장참여를 억제하며 과거와 같은 체제안정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많은 부분에서 현재 정착된 경제시스템의 행위적·기능적 정합성과 맞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반전시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역 시장화 진화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앞으로 북한 경제시스템이 새로운 정합성 균열이 일어날 단층선에 대한 예측과 그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행위자에 대한 분석이 긴요해진다. 이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현재 별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기업 부문의 새로운 부상 가능성도 다루고 있다. 기존 계획경

제에서 정합성을 갖고 있던 다수의 국영기업들은 중앙집중적 자원 분배체계가 붕괴된 이후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 하지만 이들 내부에서는 중간당 간부와 지배인의 새로운 거래관계가 발생하며, 시장화에 편승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색다른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북한 시장시스템이 낮은 수준의 조직화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한층 조직화된 경제주체가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복잡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자기조직화를 통한 행위자의 고도화 과정과 연계시켜 해석될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 진화 방향에 적응되어가는 행위자들이 점차 조직화되고 고도화될수록 변화의 관성은 한층 강해지며, 북한 기존 지배체제의 역행 압력도 쉽게 무력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결국 북한 경제시스템의 진화방향에는 현재 대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확대되는 정합성 균열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조직화 가능성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체제는 김일성 사후에도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유일 지배체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고수해왔다. 최악의 경제위기와 체제 내부에서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북한의 사회구조를 떠받치는 위계적 상호작용과 이를 통해 형성된 거시적 관성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체제 내부 구성원들간 상호작용의 현황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체제 수준의 관성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의 규명을 시도하였다.

우선 김정일 주변의 핵심 권력집단에 대해 수행여부 통계를 바탕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수행통계를 3개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여 시기별로 선군정치가 강화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가시화하였다. 아울러 김정일을 제외한 측근들의 연결망내 위치를 판별하여 김기남의 중요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주요 인사들의 이후 후계체제 수립에 있어서의 중요도를 예측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층부의 지배 시스템이 갖는 문제를 복잡계적 담론틀에서 조망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과 기타 연구로 드러난 북한의 지배 시스템은 김정일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과부하가 걸려 있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외부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정상국

가화에 필요한 내부적 변화의 가능성을 억제하는 이러한 치명적인 관성은 다른 사회 시스템의 행위자들이 빚어내는 변화의 동력과 충돌하여 체제 균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큰 대목임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북한의 당과 국가기구 체계가 갖는 특성을 복잡계적 ‘질서’와 ‘무질서’의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다년간 비정상적인 위기관리체제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압력과 돌발상황에의 대처 능력을 계속 떨어뜨리는 비적응적인 무질서 요인을 다양한 인터뷰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북한 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이런 양면성은 사회 시스템 측면에서 자발적의 정상국가화 경로 설정의 어려움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충위를 내려가 새로운 사회 시스템 변화의 경로로서 시장 시스템과 결합된 일반 주민차원의 자기조직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렸다. 북한 체제는 중하층부에 걸쳐 시장을 매개로 한 사회연결망의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관찰되는 다양한 자기조직화는 북한 내부의 사적 담론을 성장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한층 조직화된 변화의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수준에서는 사적 담론의 비판대상이 기생적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간 간부층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아직 체제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체제가 복잡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단속적 변화의 기본 전제조건을 충족해가는 과정으로 볼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상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셋째,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본 협동연구의 기본적인 개념인 ‘정상국가’에 대한 기준 정립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취약국가, 불량국가 등의 개념이 다소 무분별하게 혼용되었다. 이러한 모호성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북한 정상화라는 지향점을 흐리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비정상국가들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북한이 당면한 인권탄압과 핵무기 개발이라는 큰 비정상 요소를 지목하고, 이의 순차적 해결 순위를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외부 행위자인 한국 및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북한의 시스템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①유화정책, ②관여정책, ③봉쇄정책, ④rollback정책의 4가지로 분류하여 그 일반적인 효과와 기타 변인들이 이에 기여하

는 바를 논의하였다. 특히 과거 대북 유화정책의 틀 속에서 온건책 중심으로 짜였던 정책기조가 현 정부 들어 중립적으로 변모한 이후 더욱 모호해진 북한의 전략적 딜레마를 체계화하였다. 이를 통해 강경책과 온건책을 종합하여 발전적인 행동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반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에 더해 비정상국가로의 이탈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이란, 수단의 4개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는 국제사회의 공조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여 현재 사실상 정상국가로 복귀 또는 그 과정에 있으며, 반면 이란과 수단은 여전히 비정상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의 경우 내부 체제 온건파로부터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거나, 극렬 테러집단과 같은 공동의 체제 위협세력을 직면한 상황에서 외부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경우였다. 이란은 대내적인 변화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결정적인 정상화기준인 핵 문제에 있어서는 전 국민적 안보위협이 심각하여 그 압력이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수단의 경우에는 주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제재를 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감쇄 요인들이 한층 심층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접근책 마련이 필요하다.

3. 2010년(2차년도) 연구의 내용 및 추진과정

제2차년도의 연구방향은 제1차년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인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①정치, ②경제, ③대외관계의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첫째, 정치분야에서 북한 정치를 정상국가화한다는 것의 기본 전제는 북한이 비정상적인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므로, 우선 북한 정치의 비정상적인 특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정치의 정상화 지원과 관련한 당면 목표를 중국식 정도의 집단지도체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수단을 제시하려 한다.

둘째, 경제분야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경제적 구성요인을 ‘시장 확산’이라고 간주하고, 복잡계 방법론을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 진화에 관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시장 진화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시장 확산’을 초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의 불량국가에서 나타나는 행태적 속성을 국제체제, 국내적 속성, 관계적 특징의 측면과 함께 경제적 속성 및 이들과 국제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규명하려 한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협동연구는 통일연구원이 기본계획서와 이에 따른 연구분야 및 세부 연구주제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연구기관 및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를 엄선하여 학제간 연구 특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2개 세부과제를 담당하고, 1개 세부과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참여하여 협동연구망을 구축하였다. 이외에도 서울시립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세종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관련 연구자들이 각 세부과제별로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발전적인 복합학문 연구의 전범을 세우고자 노력하였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라는 협동연구의 맥락 속에서 세부과제별로 추진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재구성한 협동연구 총괄보고서임을 밝힌다.

제2장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제2장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1. 머리말

북한구조가 아무리 ‘유일구조’라 하더라도 이미 구조화된 이상 그 구조를 이루는 개체들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 속에서 작동될 수밖에 없다. 즉 김정일이 발하는 모든 정책은 내외적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주민들에게 부딪혀 환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비록 북한에는 공식적인 환류기제가 부재 하지만(있다 해도 미미한 정도), 각종 정보기관에 의해 인민들의 의견이 김정일에게 입력되고 있다. 따라서 유일구조 자체는 매우 경직적이지만, 구조를 이루는 각 주체들의 역동성도 무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북한체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북한의 국내구조보다 훨씬 더 큰 국제구조의 중요성이다. 국제구조는 현 북한구조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사적 냉전구조는 끝이 났지만 아직도 한반도에는 냉전구조가 잔존해 있고,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단시일 내에 청산될 것 같지 않다. 이로 인해 견고한 북한의 내적 구조는 쉽게 연성화되지 못하면서 더욱 강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오늘날의 북한 독재체제 형성 배경을 세계구조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북한은 국가적 자율성 차원에서 보다 개방적인 체제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폐쇄적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현재는 주변 환경과 깊은 연동성을 가지고 생성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이 간과된다면 현재 북한 정치체제를 이해하고 그 해법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 체제의 비정상성을 구명함에 있어서 북한내부 요인의 상호작용은 물론 북한과 외부요인과의 상호작용도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 본 내용은 전현준·김국산·김갑식,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10-16-02)』 연구를 요약한 것임.

본 연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북한이 외부요인 때문에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였고, 그 수단으로 ‘선군정치’를 도입했다는 점이며, 북한정치의 정상화 여부는 외부요인과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와 깊이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 정치를 정상화시킴에 있어서 대전제는 북한이 비정상적인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스스로 수령제라는 최고의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왕조시대의 ‘왕도정치’ 또는 ‘철인정치’에서나 가능한 주장인 이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조화롭지 못한 주장이다.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된 정치체제의 부작용은 경제난, 인권침해, 주변국들과의 부조화, 무력증강 등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의 궁극적 피해는 인민들에게만 돌아간다. 따라서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는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이상적인 형태(ideal type)의 민주주의보다는 점진적인(gradual) 형태의 민주화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물론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직접적인 요구나 비난은 북한의 반발을 사서 오히려 북한체제를 폐쇄화시키는 역할만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목표는 북한이 최소한 중국정도의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 및 당내 민주주의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과연 누가, 어떻게 북한 정치를 중국 수준으로 변경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대전제는 내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전쟁이나 대량학살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 침략에 의해 북한체제를 전복시키고 민주정치를 실현시킨다면 전쟁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고, 만일 진정으로 북한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라크에서처럼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북한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결국 본 연구의 범위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의식화되어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체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에 국한한다. 결국 그것은 ‘평화적 이행전략(peaceful transition strategy)’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구조상 가장 중요한 변수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상관관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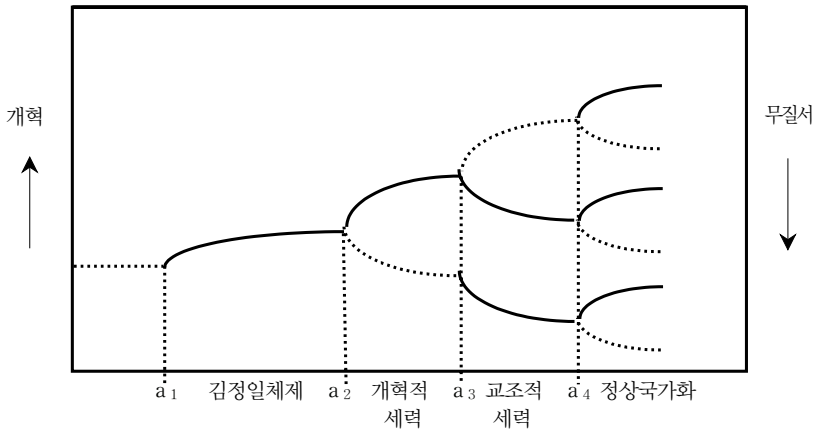
구명한다. 그러나 연구상 중요한 문제는 이들 변수간 상관관계가 상호 균등한 힘에 의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실제로 힘의 역학관계상 그것들이 동률적으로 작용되기는 어려울 것인 바, 공인된 힘의 크기를 고려하여 변수상 호관계가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변수가 북한변수를 압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북한의 지속과 변화도 그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의 현재는 북한경제난이라는 내부의 문제 보다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응전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경쟁과정에서 여타 약소국들과는 다른 특색 있는 행동을 보여 왔다. 약소국 행동의 결정주의적 태도가 아닌 상대주의적 태도가 나타난 것이다.

결국 북한의 유일체제적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수많은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더 이상 북한이 그러한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도래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이 또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복잡계 이론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빈번한 상호작용이 특정한 ‘끌개(attractor)’를 중심으로 뭉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상황에서 발현된 다양한 정치·사회집단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과 경쟁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크게 4개의 특징을 가진 대립된 그룹으로 결속되어 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①체제수호를 원하는 체제 강경파, ②현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체제 온건파, ③급진적인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반체제 급진파, ④현 체제를 부정하지만, 점진적 체제전환을 희망하는 반체제 온건파 등이 등장하게 된다. 체제 강경파는 현상유지를 위해서 반체제세력을 군·경찰력을 동원하여 억압할 것을 선호한 반면, 반체제 강경파는 급진적인 체제전환을 위하여 폭력적 수단까지 동원하려고 한다. 체제 강경파와 반체제 강경파 양극단 사이에 유혈사태를 동반한 파국적 변화를 원하지 않는 체제 온건파와 반체제 온건파가 위치한다. 체제 온건파는 일당독재 등 기존의 권력 구조를 골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경제개혁을 우선시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반체제 온건파는 시장경제 도입과 동시에 다당제 민주화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요약하면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북한 정상국가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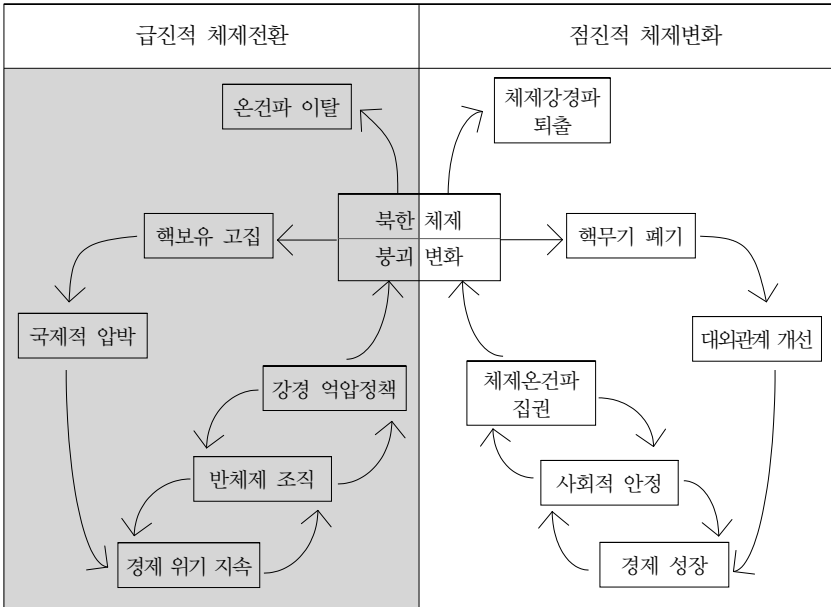
북한은 현재 체제 강경파들이 집권한 상태에서 다른 집단이 정치세력화 되지 못하고 잠복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체제가 소멸해 가고 있는 역사적 현실은 북한에서도 체제변화가 불가피하며 체제 강경파에 도전하는 세력이 점차 표면화될 것으로 예측하게 한다. 북한의 체제 강경파가 계속 집권하며 국제적 고립상태에서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북한은 결국 내부적으로 스스로 붕괴되거나 외부적으로 전쟁을 도발하여 파멸하게 될 것이다.

한편 <그림 II-2>에서 보듯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개방을 추구해 나가면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경제개혁을 실시하여 시장경제를 추구해 나가는 중국·베트남 모델을 따라 정상국가화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체제개혁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4대 그룹 간에 관계가 적대적 대립관계로 발전하여 반체제 강경파가 득세할 경우 소련·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유사한 급진적인 체제전환을 겪게 될 것이다. 북한체제의 변화 방향은 이와 같이 크게 ① 중국·베트남식 점진적 개혁, ② 소련·동유럽식 급진적 개혁 등으로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북한이 과연 어느 경로를 통하여 정상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복잡계 현상을 보이는 체제전환은 단일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국내외 촉진 요인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변화 방향은 최종적으로 4대 정치집단의 세력관계에 의해 결

정될 것이다. 하지만 체제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전개될 권력게임은 북한 내부 4대 정치세력관계로 국한되지 않는다. 대양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더불어 북핵문제로 인해 국제화된 한반도 통일문제를 고려해 볼 때, 북한체제변화 과정에서 남한은 물론 미국·일본·중국·러시아 같은 외부세력도 행위자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림 II-2> 북한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이들 외부세력들은 북한 내부의 4대 정치집단과 각기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 복잡한 권력게임에서는 그 최종결과를 사전에 미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현 정권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면 다양한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도 강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보이게 될 것이다.

경로의존성이란 정치·사회적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좋은 틀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매너리즘이나 관성과 같은 의미이다. 경로의존성이 북한의 체제전환에 주는 의미는 북한의 경우에도 과거로부터 승계되어 온 경로가 북한의 일당독체체제를 장기간 온존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새로운 길이 낡은 길보다 낫다

는 것을 어떻게 깨우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려는 북한 지도부 및 주민들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북한의 각 주체들이 변화를 해도 행복한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만 든다면 소련·동유럽식 급진적 체제전환보다는 중국·베트남식 모델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식 모델을 따라 정상국가화 될 경우, 향후 북한 내부의 권력게임은 체제 강경파가 퇴출되고 온건파나 전문가(expert)가 득세하는 방향의 세대교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강경파가 득세하여 북한 정권이 핵개발을 고집하고 국제적 고립상태를 지속해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체제가 몰락하는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2. 북한 정치의 비정상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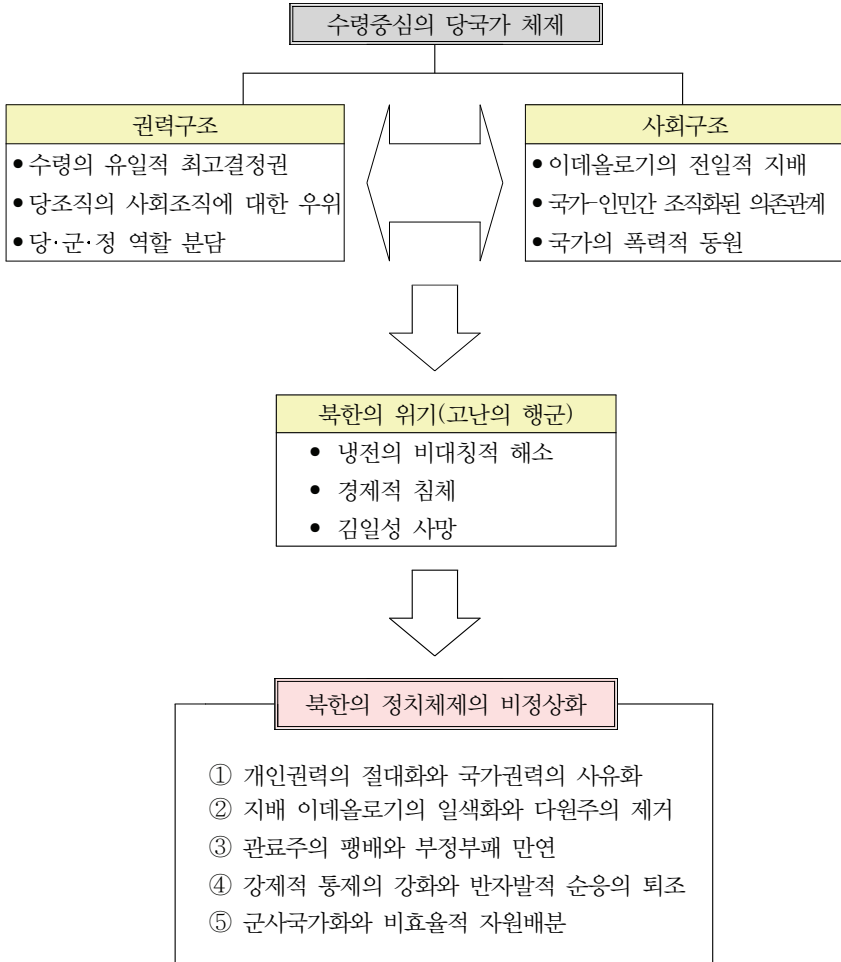
린즈와 스테판(Linz & Stepan)의 ‘전체주의적 경향을 갖는 정권의 특징’을 중심으로 세보르스키(Przeworski)의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의 완결 가능자’ 등의 주요 지표들을 결합하면, 최고지도부의 통제방식(법치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다원주의, 관료주의, 지배이데올로기, 사회적 동원, 군부의 정치참여, 인권문제 등을 정치민주화의 지표로 추출할 수 있다.¹⁾ 여기서는 사회주의 국가 또는 제3세계 국가의 정치실태 분석의 도구를 원용하여 북한정치의 정상화 정도를 평가한다.

사실상 김정일 정권의 ‘비정상적’ 정치현상의 대부분은 김정일 정권 정치체제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가 사회구조, 즉 이데올로기의 전일적 지배, 국가-인민간 조직화된 의존관계, 국가의 폭력적 동원 등과 상호작용하여 북한정치의 비정상적 모습인 ① 개인권력의 절대화와 국가권력의 사유화, ② 지배이데올로기의 일색화와 다원주의 제거, ③ 관료

1) 린즈와 스테판의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5가지 영역은 시민사회(결사와 통신의 자유), 정치사회(자유적이고 포괄적인 선거 경쟁), 법의 지배(헌정주의), 국가기대(합법적-법적 관료주의적 규범), 경제사회(제도화된 시장) 등이다.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ch. 1. 세보르스키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의 완결 가능자’로 당파적 정권교체의 진정한 가능성, 정권교체의 결과로 인한 정책역전의 가능성, 문민에 의한 효과적인 군부통제 등을 들고 있다. Adam Przeworski, “Games of Transition” (Unpublished Paper, 1990), 임혁백, 『시장·국가·민주주의: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서울: 나남출판, 1994), p. 230에서 재인용.

주의 팽배와 부정부패 만연, ④ 강제적 통제의 강화와 반자발적 순응의 퇴조, ⑤ 군사국가화와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을 강제한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면 <그림 II-3>과 같다.

<그림 II-3> 북한 정치체제의 비정상화 체계도



가.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

북한의 정치체제인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의 세 가지 특징은 수령의 유일적 최고결정권·수령의 직할통치, 당조직의 여타 사회정치적 조직에 대한 우

위, 당(정치사상진지)·군(군사진지)·정(경제진지) 역할분담 등이다.²⁾ 이 정치체제는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 형성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주체의 혁명관’ 등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고, 1990년대 중반 ‘내각책임제’, ‘선군정치’ 등 발전기제가 도입되어 ‘당·군·정 역할분담’이 구축됨으로써 발전·공고화되었다.

북한의 정치체제인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이루는 모든 조직들과 기구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활동하게 하며, 전당·전국·전군이 수령의 명령·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하게 하는 ‘혁명적 영도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권력이 수령 개인에게 집중되고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점 때문에 북한의 정치체제는 현재 비정상화의 모습을 극화하고 있다.

나. 김정일 정권의 비정상적 정치구조

(1) 개인권력의 절대화와 국가권력의 사유화

(가) 수령의 인적 통치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의 핵심은 수령제다.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최고 대표자, 혁명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 혁명의 최고영도자 등으로 일컬어지는 수령은, 첫째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는 것, 둘째 인민대중을 위력한 혁명역량으로 만드는 것, 셋째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정확한 투쟁구호와 올바른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총체를 유일적으로 영도함으로써 혁명을 곧바로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 밖에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며 완성할 혁명의 참다운 후계자를 키우는 것과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세계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밝혀주며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는 것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 당·군·정 역할분담은 당(黨)이 체제유지 상징화와 대내통합을 위해 정치사상적 진지를, 군(軍)이 위기를 관리하면서 군사적 진지를, 정(政)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적 진지를 각각 거의 배타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김관식, 『김정일정권의 권력구조』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참조.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는 수령을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을 지니고 시대의 요구와 대중의 혁명실천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지도이론을 창시하는 위대한 사상이론가로, 풍부하고 세련된 영도방법과 예술을 지니고 수백만 근로인민대중을 혁명투쟁으로 조직 동원하는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영도자로, 또한 인민대중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 복무, 공산주의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끝없는 충실성, 강毅한 혁명적 원칙성과 백절불굴의 투지 등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과 혁명적 품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지니고 있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며 노동계급의 위대한 혁명가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정치적 집단으로 결합된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일반적으로 생명유기체의 뇌수는 각 기관들과 구조의 내적·생물학적 요구를 분석 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며, 생명유기체를 이루는 각 기관들과 구조의 모든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고 지휘함으로써 하나의 방향으로 활동을 벌리도록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활동을 하나로 종합하고 통일시켜 하나의 목적 실현으로 조직 동원하고 지휘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수령³⁾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하다.

(나) 최고지도자의 절대권력과 우상화

김정일은 정치적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늘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간부사업에 있어서 북한은 전통적으로 한 곳에 오래 근무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 개인의 권력집중을 막기 위해 간부들의 인사이동을 빈번히 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이 군을 현지지도하는 것은 군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군에 대한 감시의 수단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일례로 1996년 황해남도 송림에서 경제난으로 제철소의 기계설비가 다 뜯겨져 고물로 판매되는 일이 있자, 김정일은 보위사령부를 동원하여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지시하였다. 보위사령부는 ‘도시정화사업’이라는 이름하에 탱크를 동원, 송림을 포위하여 일반인은 물론 국가보위부·

3) 립정만, “진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독창적 사상,” 『철학연구』, 4호 (1988), p. 16.

당 간부를 가리지 않고 관련자를 색출하였다. 송림을 시작으로 해주·신의주·남포 등에 대하여 도시정화사업을 하여 수십 명을 총살시킴으로써 북한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도시정화사업을 통해 보위사령부의 위세가 높아지자, 김정일은 보위사령부를 인민무력부 보위국으로 격하시킴으로써 힘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⁴⁾

이와 같이 절대권력을 가진 김정일의 사적 관계 중시, 상호경쟁 유도 등의 통치방식, 즉 명령과 지시의 제도적 계통을 무시하는 통치방식을 보면, 김정일과 측근의 상호작용이 경쟁모델과 형식주의모델의 혼합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이 각 기구의 최고 책임자에게 전권을 위임하지 않고 하위 직책의 간부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임무도 주고 그들로부터 보고도 받는다는 점은 경쟁모델의 특성이다. 김정일은 당의 부장이나 내각의 상보다는 부부장이나 부상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으며 권력의 공식 서열이 낮은 인사에게 별도의 임무를 주기도 한다. 한편 김정일은 당·인민군·내각·공안기구 등을 별도로 장악하고 그들로부터 올라오는 정보를 직접 취합한다. 보통은 이들 사이의 정보 흐름이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형식주의모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오직 국정 전반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일뿐이어서 정책결정이 일관성과 단일성을 가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유사시 그를 대체할 인물이 적절치 않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시스템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사람에 의한 통치의 결과이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결정구조 하에서 당연히 김정일이 과부하 걸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⁵⁾

수령제하에서 권력의 집중과 지속·발전을 위해 최고지도자를 이상화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수령제를 강화시키지만 국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국가정책의 쇠퇴·건전화의 기회를 차단시킨다. 북한에서 개인 이상화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가진 수령의 자질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을 강화한 바 있다. 1998년 10월 김정일의 당 총비서 1돌을 맞는 중앙보고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은 김정일의 업적으로 지난 30여 년간 당

4)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171-173.

5)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29~39.

건설과 군 건설,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현명하게 영도하여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이룩한 것을 들었다.⁶⁾ 『로동신문』도 김정일이 문무충효를 겸비한 정치가로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효성과 고결한 도덕의리, 정치와 군사를 올바르게 결합시켜 능란하게 풀어나가는 영도적 수완과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 비상한 정치감각과 혁명적 전개력을 가지고 있다고 선전하였다.⁷⁾

2010년 9월 후계자로 공식화된 김정인에 대해서도 충성 우상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군부대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사회 각조직과 단체·기업소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성의 결의모임’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1970년대부터 관례화된 대표적인 ‘우상화 작업’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큰 소리로 따라 외치고,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로 끝마친다. 결의모임에 불참하면 1년 내내 자기비판 무대에 서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9년 하반기에 중앙당 간부들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김정은 선전자료에 서의 우상화는 거의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수준이다.

(다) 3대 권력세습

북한은 2010년 9월 당대표자회를 통해 3대 권력세습을 공식화하였다. 건강 문제로 후계체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인데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혹 다른 인물이 후계자로 등장할 경우, 정통성 시비로 권력 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김정일과 북한 지도부가 ‘백두혈통’으로 이해관계의 공통지점을 찾은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를 표방한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고 자본주의 국가를 포함하더라도 민주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은 흔치 않은 현상이다.

이러한 권력세습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신비화를 동반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사회의 근대적 혹은 현대적 속성의 미발전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의 현대화가 뒤쳐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제 권리에 있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권·시민권·사회권 등의 미성숙성을 드러낸 것이다.

6) 『조선중앙통신』, 1998년 10월 8일.

7) 『로동신문』, 1998년 10월 19일.

(2) 지배이데올로기의 일색화와 다원주의 제거

(가) 사상통제와 정책대결의 실종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서 김일성주의를 일색화하고 신념화하지는 주장뿐만 아니라, 북한헌법 제3조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지배이데올로기로 명시하고 있고, 2010년 9월 개정된 당규약에서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실현하자고 강조하듯이, 북한은 지배이데올로기로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파벌을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정치생활과 일상생활 그리고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으로서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보장해주고, 김정일·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을 뒷받침하며 대중동원체제를 강화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체계는 사상통제에 지대한 효과를 발하고 있다. 교육체계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서 유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총체적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 내용의 핵심은 이른바 ‘책임의 전가(transference of responsibility)’이다. 북한은 위기상황의 책임을 지도부 내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 자연재해, 하위간부, 개인, 내부의 적 등 외부로 돌리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생활총화가 가동되기 때문이다. 지배이데올로기의 일색화에 따른 사상통제와 교육장악은 북한 정치체제 내에서 김정일의 정책과 노선에 반하는 정치세력의 성장을 사전적으로 완전 봉쇄한 효과로 이어졌다.

(나) 당의 전사회적 통제

북한이 유일사상체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시종일관 관철시킨 원칙은 ‘당의 영도’였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건설할 때부터 ‘당의 영도’ 원칙을 견지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말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 ‘공산당 독재’를 포기했을 때는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북한은 1980년대 말의 국제상황을 진보와 반동, 혁명과 반혁명 사이의 투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위업, 인류의 자주위업이 제국주의자들의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북한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지닌

당의 임무가 보다 막중해지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을 더욱 강화하고 영도적 역할을 높이는 것을 상징하였다. 북한은 만약 당의 영도가 사람들의 창발성을 억제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를 거부한다면, 사람들은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에 젖어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며 혁명대오는 분열되어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게 된다고 자본주의의 ‘공세’에 대한 방어책으로 ‘당의 영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⁸⁾

또한 북한은 김정일 시대의 국가목표인 강성대국 건설의 성공과 승리를 가능케 하는 결정적 조건으로 당의 강화와 영도적 역할의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강성대국 건설의 주체는 근로민중인데, 근로민중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고 조직·동원하려면 당의 영도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 북한에서 사회주의가 발전한 것은 당이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민중의 지향과 나라의 실정에 타당한 주체적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전체 민중을 조직·동원한 결과였는데, 강성대국 건설도 당의 전략 전술적 영도를 끊임없이 강화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은 사회주의 집권당으로서의 영도권을 약화시키거나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⁹⁾

(3) 강제적 통제의 강화와 반자발적 순응의 퇴조

(가) 반자발적 순응의 퇴조 및 민생형 일탈의 증가

북한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통제사회이다. 모든 주민은 자기 직장에서 조직 생활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한 당이나 근로단체에 가서도 정치적으로 조직생활을 해야 했다. 당원은 당 조직생활을, 청년은 청년동맹 조직생활을, 노동자는 직업동맹 조직생활을, 가정주부는 여성동맹 조직생활을 해야 했다. 북한사회는 이러한 중층의 통제구조와 연대책임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설사 불만이 있더라도 국가와 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북한주민의 정치적 행동은 국가에 대한 순종과 국가시책을 준수하는데 중요

8)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1990.10.3)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313.

9)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p. 54~56.

성을 두는 체제 순응적 행동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주민의 정치의식은 상당부분 국가의 복지관료적 보호에 의한 온정주의적 응답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북한의 배급체제와 평준화된 교육 및 직업보장, 즉 사회적 재분배와 복지에 대한 약속은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이 국가나 관료들에게 매우 강한 의존성을 갖게 만들었고, 이는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국가조직망에 포섭되어 체제에 대한 자율적 저항을 사실상 포기하게 만든 것이었다. 실제로 생활비와 배급, 휴가와 여행, 진학과 직업알선 등 일체의 주민활동에 있어 노동행정당국의 승인이나 배려가 있어야 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주민을 통제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통제는 <당·국가 통제 - 생산현장에 포섭 - 배급망과 복지망을 통한 일상생활 지배>라는 일련의 네트워크를 통해 관철되었는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래 경제난과 이로 인한 생활총화의 약화로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당·국가 통제의 중요성과 실효성이 훼손되었다.¹⁰⁾

이처럼 1990년대 공식 계획경제의 약화와 배급제 마비상황은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해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주민들의 ‘조직화된 의존관계’를 약화시켰다. 그 결과, 주민들의 사고방식에서 반정치화·원자화·개인화된 정치의식이 강화되었다. 먼저 북한주민은 국가가 자신의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비공식 경제를 통해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집단주의 태도에서 벗어나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개인주의적 실용주의 태도를 중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북한사회에서는 사상의식보다는 화폐물신주의가 팽배해져 배급주의, 소유의식, 불법적 상행위, 뇌물 등이 횡행하고 있다. 이타적인 공적 연대감이 약화되고 타산적인 사적 관계망이 발달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당·국가와 인민들 사이의 은혜와 충성의 위계적 교환관계의 지배·피지배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배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주민들이 자구 노력 과정에서 물질적 가치를 선호하기 시작함으로써 당·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와 사회현실 간에는 현격

10) 김갑식·오유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사회에서 나타난 의식의 단층,”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2호 (2004), pp. 95~96.

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당·국가체제의 통제력이 약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법적 이동이나 탈북이 많아지고 생활총화의 참석률이 떨어졌으며, 외양적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반항하는 ‘일상생활형의 반항,’ ‘민생형 일탈’이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작업 태만, 직장 결근, 사회동원 불참, 직장 절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형의 반항은 일부에서는 직접적 공격형태로 발전하거나 자포자기식 체념이 되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지배인의 집을 습격하거나, 농민시장에서 안전원들의 텃세와 강압에 주민들이 반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반자발적 순응의 퇴조로 인해, 당국가체제는 당근보다 채찍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다.

(나) 일상화된 통제와 내핍담론 주입

북한에서는 조직화된 의존관계에 따른 반자발적 순응의 퇴조에 의해, 국가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충성도가 하락하고 있고 주민들은 독자적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동의기제는 작동하지 않고 오직 억압적 통제기구의 작동과 내핍담론의 주입만이 있을 뿐이다.

물론 어느 국가든 체제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통제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독재국가들은 강력한 강제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북한과 같이 자발적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폐쇄국가에서는 강제기구의 작동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통제장치는 당조직,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보위사령부, 인민반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통제장치들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조직되어 있고, 이를 통해 주민들을 전면적·일상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당국가체제는 당이 국가나 행정부에 우선하고 당 지배는 사회의 전 부문에 걸쳐있는 당조직에 의해 실현된다. 군대에서 일반 공장에 이르기까지 해당 분야의 공식적인 조직체제와 별도로 당조직이 구축되어 있으며, 당조직의 결정권이 우선한다. 가령, 작업현장에서 작업반과 당의 세포조직이 병존하고 있고, 작업반장보다 당의 세포위원장의 영향력이 크다. 또한 당은 당원들에게 행정기관과 일반 주민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당조직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민들의 공적·사적 생활을 통제한다. 이와 같은 조직구조는 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전체 사회를 통제할 수 있게끔

한다.

북한은 억압적 통제기구의 작동뿐만 아니라 내뺨담론을 재생산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정신적으로도 통제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표적 내뺨·인내 담론은 ‘붉은기 사상,’ ‘혁명적 군인정신,’ ‘강계정신’ 등이다. 북한은 이를 통해 영도자와 당·국가에 대한 충성과 내뺨과 버팀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다) 주기적 검열과 인권 탄압

반자발적 순응의 퇴락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통제기구의 효율적 작동 때문이다. 북한 억압적 공안기구의 범법행위에 대한 통제 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체제·정권 비판,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저항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북한 헌법과 형법에는 각종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식량 및 생필품 획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검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비상설 검열조직들이 항시 검열체계를 갖추고 상설 검열조직처럼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 그루빠는 ‘10.9 상무,’ ‘6.4 그루빠’ 등이다.

북한에서 가장 혹독한 검열은 중앙당 조직지도부 검열이다. 이는 북한정권의 특성상 다른 검열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한 특수한 검열이다. 군 보위사령부 검열과 국가보위부 검열도 대단하지만, 이들의 검열에는 한계가 있다. 보위사령부 검열의 경우, 군 내부를 비롯해서 지방 당기관이나 개별 간부들도 검열할 수는 있으나, 중앙당 내부와 국가보위부를 수사할 수 없다. 또 보위부 검열의 경우, 중앙당이나 군 내부, 보위사령부를 검열할 수 없다. 그러나 조직지도부 검열은 중앙당 내부와 보위사령부, 보위부를 비롯해서 북한의 모든 특수기관을 검열할 수 있는 전능의 검열이다.

3. 북한 정치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북한 정치분야의 정상화는 원칙적으로 북한 권력엘리트 또는 주민들의 자발적 행동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 정치의

주체인 김정일 위원장, 당·정·군 엘리트, 인민 중 어느 부문도 주도적으로 북한정치의 비정상성을 교정할 가능성이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외부의 지원에 의한 북한 정치의 변화가 더 유효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즉 ‘상호주의’ 또는 ‘주고 받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의미이다. 게임이론의 대가인 미국의 메스키타(Mesquita) 교수도 2004년에 당시 부시행정부가 ‘북핵폐기’와 ‘경제지원’을 교환하는 방안을 권유한 바 있고, 이것은 2007년 ‘2.13 합의’로 구체화되었다.

가. 목표

북한 정치의 정상화 지원방안과 관련한 당면 목표는 북한 정치가 ‘중국식’ 정도의 집단지도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할 경우 북한의 반발은 물론 급격한 붕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3대세습을 도모하고 있고, 이것은 ‘4대세습’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의 정치세습은 유헌통치를 낳고 이것은 북한체제의 담보상태를 세습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북한 내에 최우선적으로 민주집중제 또는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해야 ‘빈곤의 세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의식화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의식화는 외부정보의 유입이나 외부와의 접촉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대북전략은 이러한 기초 하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전략

(1) 대남 의존도 심화전략

한국은 북한의 대남 의존도 심화 전략을 수립하여 북한이 더 이상 한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재정정책을 통해 북한이 남한을 경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은 남한을 독립적인 변수로 고려하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부차적인 변수로만 취급하여 왔는 바,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근본적 변화’는 아니

지만 ‘전술적 변화’라도 보인다면, 이를 포착하여 북한내에 변화의 맹아를 심기 시작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한국은 우세한 경제력을 활용하여 ‘그랜드 바겐’을 비롯한 대규모 대북 프로젝트를 통해 자본주의 사상을 북한주민들에게 주입시켜야 한다. 북한은 ‘비사구루빠’를 통해 대대적인 ‘한류’ 차단을 시도하겠지만 역사의 힘은 큰 데로부터 작은 데로 흐르기 마련인 바, 남한의 우세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북한의 독재정신을 압도하고 말 것이다. 비록 북핵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6자회담 등 다자간 회담을 통해 해결하고 북한 변화문제는 남한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국론통일이 필요할 것이다. 대북지원을 ‘퍼주기’로 인식하는 한 북한 변화전략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국론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대토론회가 개최될 필요가 있다.

만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개성공단 이외에 해주공단이나 남포공단 조성을 통해 대남 경제 의존도를 심화, 한국이 북한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는 주도권 장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미리미리 의제나 대화기조를 선점해야 한다. 북한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사안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해 나가야 한다. 만일 북한이 남한의 직접 지원을 꺼리면 중국 및 러시아를 경유한 우회로를 통해 ‘한국의 바이러스’를 북한에 들여보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미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을 통한 자본주의 유입 전술도 필요하다. 2005년 9월의 BDA 사건 이후 미국은 북한의 외화자금 흐름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기제를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바,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차관의 동선도 미국에 의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천안함 사건’ 이후 ‘제2의 BDA 방안’을 통한 대북 경제제재가 작동되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국면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개방문제가 주요 담론이 될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두려워하고, 김정일을 비롯한 핵심권력층이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명분인 ‘흡수통일’ 시 보복문제인 바,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핵심관계자 몇 명 외에는 관계가 없는 일임을 선무하여야 한다. 북한은 독일 통일 이후 관료들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어서 북한

관료들은 이를 사실로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공개·비공개적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전파해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내부에서의 정치적 저항이 없이는 북한체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상층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안심 전술’이 구사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북한주민들에 대해서는 남한체제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나이(J. Nye)의 스마트 파워(smart power) 개념에 입각하여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정치문화가 매우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독일통일의 경우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문화를 흠모하여 ‘항복’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사업자, 관광객, 회담성원 등 모두가 ‘통일꾼’이라는 신념으로 북한방문시 접촉하는 북한주민이나 관료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2) 북한내 민주화운동 촉진 전략

“북한은 언제 붕괴되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 체제는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붕괴시키는’ 것이다. 북한붕괴의 주체는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외부의 힘이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의 힘이다. 북한 외부는 또 다시 미국·중국·일본·러시아·남한 등이 있을 수 있고, 여러 형태의 연합군도 가능하다. 내부의 주체는 김정일 자신, 당·정·군 권력 엘리트, 북한인민 등이다. 먼저 내부에서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주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김정일이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처럼 스스로 주체 사회주의를 해체할 수 있는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 만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이다. 김정일이 어느 날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해체를 주장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북한의 지도자를 선출한다고, 남한과의 합병을 추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당·정·군 권력엘리트 중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 중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 군부 쿠데타이다. 그러나 군부는 3중 4중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일반보병들은 군총정치국과 모든 훈련을 상의해야 하고, 군보위사령부의 감시를 받는다. 따라서 일반 부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다. 다음으로 12만 명에 달하는 호위사령부 소속 군대인데 이들 또한 철저

한 감시 하에 있어서 쿠데타가 쉽지 않다. 더구나 이들은 장교들이고 사상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특별대우를 받기 때문에 김정일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마음이 강하다. 최측근들만 모이는 ‘비밀파티’시에 참석자 중에서 누군가 김정일을 시해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으나, 철저한 검색과 감시가 병행되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다.

셋째, 민중폭동에 의한 체제전복이다. 경제난으로 인한 광범위한 불만이 민중에 의해 현재화되어 북한 전역에서 민중폭동이 일어난다면 체제붕괴나 군부쿠데타의 가능성이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민중들이 정치적 자각을 못하고 있고, ‘나라님’에게 저항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이라는 의식 때문에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비록 저항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2중 3중의 철저한 감시망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집단화되기 힘들다. 만일 반정부 계획을 도모하다 발각되면 3족이 멸종을 당하기 때문에 감히 이를 실행에 옮기기도 쉽지 않다. 민중이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탈북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북한체제 붕괴는 외부의 지원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북한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입수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희생이 뒤따른다는 정치적 자각이 있어야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정치적 저항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와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매우 증대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간파한 북한 당국이 ‘자본주의 황색바람’ 차단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지도부의 차단정책에 대응해서 그 보다 훨씬 더 정교한 돌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판 고르바초프’가 등장할 것이고 민중혁명이 발생할 것이며 권력엘리트가 분열할 것이다.

다. 수단

한국은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 정치의 정상화는 물론 ‘자유주의식 통일’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을 활용해서 북한 정치의 정상화를 달성할 것인가?

(1) 경제적 수단

(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경제적 발전이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나친 서구적 관점이라는 반론이나 상반된 주장도 있지만, 경제발전과 정치발전(민주주의 및 다양성의 확대) 간의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이후의 현상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의 군사 정권 또는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과 민주화 확산, 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전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국가체계를 아래로부터 변화시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사례도 가능하다. 1980년 후반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경제적 한계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사회주의체제 및 정권의 붕괴와 시장경제체제의 적극 도입으로 이어졌다. 결국 북한의 정치 정상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확산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경제적 접근 수단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적 수단의 활용에서는 북한경제발전 지원을 통해 북한 당국 스스로 개혁·개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위로부터의 변화; transformation, 또는 타협을 통한 변화; transplacement)과 가중되는 경제난으로 북한체제의 폭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밑으로부터의 변화; replacement) 모두 가능할 수 있다.

(나) 경제제재를 통한 접근

경제제재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 제재국의 정책목표나 대상국에 대한 특정 변화를 달성하려는 외교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경제제재는 국가 전체(무역금지조치)뿐만 아니라 특정 실체(기업이나 개인)에 부여될 수도 있으며, 경제제재와 관련된 경제활동분야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일반적인 금융 거래, 기술이전,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차입·대여 보증, 여행 등이 포함된다.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로는 북한 지도부 및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 특정 정책에 대한 변화 내지는 포기를 강요, 대외경제 협력의 제한에 따른 경제난 가중 ⇒ 체제유지에 부담, 경제난 악화에 따른 주민불만 확산 등이다.

대북 경제제재의 수단은 무역거래 제재(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거래 제한, 일반무역 제한, 사치품목 거래 금지), 금융(자본) 제재(공적개발원조<ODA>의 금지, 북한의 금융자산 동결, 국제금융거래 제한, 무역금융 제한, 대북 투자 제한, 금지), 기타 제재(통신, 국제우편 등과 관련된 서비스 거래 제재, 선박 검색 강화 및 입항 금지, 항공기 이착륙 금지 등 수송 분야 서비스 제공의 규제, 관광을 포함한 인적 왕래 제한) 등이다.

대북 경제제재의 제약요인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난 가중(인도주의 문제), 외부에 대한 적대감 강화로 체제결속 및 충성 강화 유도, 장기간의 대북 제재에 따른 실효성 약화, 대북제재의 지속성 여부, 국제공조체계의 한계(특히 중국의 참여와 지지 문제), 한반도의 불안정성 제고(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우려 등이다.

(다) 경제협력 및 지원을 통한 접근

경제협력의 개념은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지원 등을 통해 특정 국가와의 관계개선 및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해당국가의 변화를 유도하고 관련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이다. 경제협력 수단으로는 긴급 구호성 인도적 지원을 비롯하여, 차관 및 공적개발원조, 민간부문의 무역거래나 투자협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대북 경제협력의 효과는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시장친화적 법제 개선(시장화개혁 가속화), 북한 지도부 및 엘리트층의 인식전환(개혁·개방에 대한 지지 확산), 경제발전에 따른 정치적 변동요인 확대(시장세력의 확산, 민주화 및 개방 요구 확대, 선군정치의 제한 등), 남북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대북 레버리지 확보(중장기적으로 북한 변화 유도수단), 경제상황 개선에 따른 북한 주민생활 안정 등이다.

대북 경제협력의 수단은 인도적 지원 확대(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취약계층<영유아, 여성 및 노약자> 등에 대한 지원 등), 경제특구 확대 개발 지원(개성공단사업 확대 및 발전, 추가적인 경제특구 개발 지원<원산, 남포, 신의주 등>), 산업협력 강화(북한의 수출전략산업 육성 지원,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 확대, 과학기술협력 강화, 첨단기술부문 협력 확대, 판매 및 유통분야에서의 마케팅 협력, 금융지원 및 협력, 차관 및 공적개발원조 제공,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남북한 금융협력 강화, 북한의 선진금융체제 도입 지원, 사회간접자본 지원, 교통·항만·공항 등 물류인프라 확충, 전력 및 에너지, 통신 관련 인프라 건설 지원, 산업단지 조성, 도시생활기반 관련 인프라 건설 지원, 인적자원 개발 지원, 시장경제교육 지원, 기술인력 양성, 교육체계 현대화 지원) 등이다.

대북 경제협력의 제약요인은 대북 경제협력의 효과는 중장기적이며,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집권세력의 권력기반 강화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정경분리에 따른 경제의 시장화 추진과 별도로 정치적 통제 강화 가능성, 경제적 성과가 현 집권세력에 대한 정당성 강화에 활용, 경제협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전략적 접근으로 인해 기대효과 제한(북한 당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부문, 필요로 하는 부문에 국한해서 경제협력 추진할 가능성) 등이다.

경제협력 주체와 관련해서는 첫째, 한국 정부가 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한국 정부가 가장 강력한 경제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승인제도를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대북 협력 통제도 가능하다.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수단은 대규모 인도적 지원,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 지원, 에너지 및 전력 지원,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허가권, 인력양성 사업 지원, 포괄적인 대북 경제제재 등이다. 장점은 정부기관 주도 하에 통합적 추진으로 효율성 제고, 북한 당국에 대한 직접적 압력, 경고 효과, 경제수단의 실효성 확보 등이다. 제약요인은 경제수단의 활용 제한(내정간섭 논란으로 남북관계 악화 가능성), 국민적 합의기반 필요, 단기적 성과에 집착(단임정부의 한계), 막대한 자원소요 등이다.

둘째, 민간단체가 되는 것이다. 2000년 이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교류 협력에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기업·대북 지원단체 등은 정부와의 협력하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경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대북 경제수단은 인도적 지원(소규모 식량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 농업협력, 교육훈련사업, 대북 투자협력, 상품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대북 관광사업 등이다. 장점은 북한주민들과의 접촉 확대를 통한 인식전환, 경제현장의 요구에 기반을 둔 변화 유도, 정부정책 집행의 보조적 역할,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성 확보(내정간섭 논란 차단) 등이다. 제약요인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 상충, 북한측의 협력사업 일방적 중단·거부에

취약성 노출, 북한 정치정상화 관련 가능성 사전 차단 가능성 등이다.

셋째, 국제협력이다. 북한의 변화유도에 있어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국제협력은 국제기구나 외국정부 단독, 양자간 또는 다자간 차원에서의 경제적 수단을 포괄한다.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경제수단은 대북 경제제재(유엔 또는 개별국가 차원의 제재), 대북 인도적 지원,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차관 및 개별국가들의 ODA 지원, 양자 및 다자간 개발협력프로젝트, 민간차원의 무역 및 FDI 등이다. 장점은 단순한 경제적 수단을 뛰어넘는 상징적 효과, 북한 당국에 대한 직접적 압력, 경고 가능 등이다. 제약요인은 개별국가 간의 대북 이해관계 상충, 정책의 통일성 및 지속성 확보에 제한, 북한 내부의 민주주주나 인권문제 보다는 군사안보적 이슈 우선 등이다.

북한의 정치정상화를 위한 경제적 수단은 실효성이 제한적이며, 그 효과도 중장기적이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가 중요하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기반 구축과 국제협력 확대도 필요하다. 북한과의 지속적인 접촉 및 교류 확대가 변화유도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수단 주체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정부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 조정 메커니즘 구축,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한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체계 강화, 특히 한중협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 등이다. 아울러 북한 정치정상화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실행 계획(Action Plan)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경제이외의 수단

(가) 외교력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2010년 G20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날로 제고되고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등의 외교적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있으나 '통일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라도 남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소위 ‘G2’인 미국과 중국의 태도라는 점에서 양 대국에 대한 외교를 활발히 전개해야 될 것이다. 첫째, 미국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북·미 핵협상시 한국의 개입 여지를 분명히 해두고 북핵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이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이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만 굴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예상되는 것은 6자회담이 잘 진행되어 북한 비핵화가 시작될 경우 한국의 대북지원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둘째, ‘떠오르는 태양’인 중국에 대해서는 동북아에서의 역할을 인정해 주고 한국의 실리를 찾는 실리외교를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문제를 자신의 국익에 필수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일정한 역할을 인정해 주되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남한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특히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이 아닌 북한의 발전을 통한 평화통일이 한국의 국시이며 통일 후에도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신뢰가 축적되면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북한개발에 참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중국과 협조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활용론’이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러시아 및 일본을 활용하여 한국의 ‘상생공영 정책’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으로서 북·러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러시아는 한국과 시베리아가스 공동개발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등 러시아는 남북한 모두와 관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러시아의 대북 커넥션을 활용하여 북한 개방을 유도하고 시베리아 가스를 북한을 통해 유입함으로써 북한의 자본주의적 마인드 습득에 일조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 악화시 북한이 가스관을 대남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으나, 이는 러시아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한이 막무가내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일본은 매우 실용주의적인 국가로서 언제든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속도 있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1970년대 초 일·중관계 정상화의 경험에 의하면 일단 일본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할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북·일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한일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회력

남한은 그동안 민주화를 달성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세력이 성장하였다. 대북지원 NGO들은 그동안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일정정도 신뢰가 형성되었다. 우리는 이를 활용하여 북한을 안심시키고 외부정보를 북한내에 유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은 남한 사회단체에 대해 철저히 검색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만 어쩔 수없이 이들을 받아들이는 형국이다.

북한은 남한 사회단체들을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 우리는 이를 ‘역이용’하여 ‘역(逆)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공동행사에 남한 인사들을 적극 참여시켜 북한의 대남 적개심을 약화시켜야 할 것이다. 남한사회의 다양성을 북한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한 동경심이 유발되도록 해야 한다. 남한의 우수한 문화력이 북한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이 보다 증대되어야 한다. 수세적인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보면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저지하고 통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의제를 선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의 ‘그랜드 바겐’을 북한이 거부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를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통이 크게’ 나가면 북한은 수세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제3장

북한 시장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제3장

북한 시장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1. 머리말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경제적 구성요인을 시장 확산이라고 보고, 복잡계 방법론을 동원하여 북한 시장의 진화에 관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세 가지 시장 진화의 시나리오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행위자 변수와 제도적 변수의 작용에 의해 북한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 경제 및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을 도출하려 한다.

이 연구가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일종의 ‘힘량 미달’ 상태라는 인식을 전제한다. ‘정상국가’라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또 이론적인 개념 규정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실존하는 국제사회의 국가들 중 정상국가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상국가’의 개념을 확정하기보다는 ‘취약국가,’ ‘불량국가’ 등 ‘정상국가’와 대립되는 ‘비정상국가’의 개념적 범주를 이해함으로써 ‘정상국가’의 범주를 역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¹¹⁾ 이러한 개념을 대입해 보면 북한은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심각

* 본 내용은 조정아·김영운·박영자,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10-16-03)』 연구를 요약한 것임.

11) 비정상국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실패국가’는 정치적 재화를 제공하는데 있어 국가의 능력과 권위가 미흡하지만 국가실재나 붕괴에 다다르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불량국가’는 국제규범을 거부하고, 테러리즘을 지원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를 말하며, 국내적인 속성과 행태에 있어서는 불평등, 차별, 억압의 정도가 극심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민병환·조동준·김치욱,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59~69.

한 위협을 가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불량국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복지 및 인권의 취약성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취약국가’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국가의 ‘비정상성’을 지적하는 담론에서 ‘비정상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축 중의 하나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문화적 비민주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난 이후 2010년 현재까지도 북한 경제체제의 ‘비정상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미세한 균열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난 이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생적 시장화’가 그러한 균열의 중심에 있다. 동유럽 공산권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경험을 통해 시장화가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임이 명백해졌다.

복잡계 이론에서는 시스템의 변화를 외부의 의도적인 간섭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구조를 갖추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자기조직화’와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요소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시스템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창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시스템의 진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자기조직화’는 ‘균형에서 떨어진 상태’ 또는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한다고 보는데,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관련해서 경제적 영역에서는 시장의 확산이 ‘혼돈의 가장자리’라고 볼 수 있다. 시장은 또한 정보와 외부 문화 유입·소통의 주요한 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의 확산은 경제적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다원화 측면에서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북한의 시장화는 경제난을 배경으로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생겨난 흐름이다. 시장은 식량과 소비재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으며, 이후 일부 생산재에까지 확대되었고 초보적 형태나마 노동시장과 자본시장까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¹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경제적 구성요인을 ‘시장 확산’이라고 보고, 시스템의 질적 변화, 즉 ‘자기조직화’와 ‘창발’을 촉진하는 요인들을 진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장 진화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다. 몇 가지 주요 변인들을 조작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의 가능성과 조건을 탐색

12)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파주: 한울, 2010);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하고자 한다.

시장의 개념은 크게 ‘시스템’으로서의 시장과 ‘공간’으로서의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화는 한편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및 확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화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발신하는 정보의 시그널에 의해 가계, 기업 등 상이한 의사결정 단위의 경제적 행동, 나아가 거시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이 조정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화는 시장의 발생 및 확대로 규정할 수 있다. 지역 시장과 외부 시장이 통합되고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어 가면 시장화가 진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물론 이 두 가지 개념은 상호 배타적이기 보다는 중첩되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시장의 개념 중 ‘공간’으로서의 시장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여기서 공간은 단순히 장소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공간적 존재방식과 그 연결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최종 종속변수로 삼는 것은 시장의 확산과 진화에 있어 가격결정 및 자원배분 시스템이 얼마나 정합적으로 형성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도소매시장 ‘공간’이 형성되고, 이를 매개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떠한 모양과 강도를 지닌 ‘네트워크’로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다.

II장에서는 북한에서 시장화를 추동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수요 측면에서는 시장행위자의 행위와 공급 측면에서는 시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특히 체제전환을 이룬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장화와 체제전환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정상국가로 향하는 도상에서 북한 시장의 현재 좌표와 향후 운동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비교의 준거를 제시하였다. III장에서는 시장 진화 모델의 골격을 세우고 완성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확산과 자기조직화의 굴곡을 중심으로 북한 시장의 역사적 진화 과정을 살펴 보았다. IV장에서는 복잡계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북한의 시장 진화 모델을 구축하였고, 가상 데이터를 적용하여 북한 시장의 진화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V장에서는 복잡계 이론 및 방법론을 적용한 북한 시장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방

13) 이석 외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16-03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118~119.

향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시장의 진화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방법을 활용하였다. 수리경제학적 시뮬레이션 모델들은 대부분 ‘현상적 모델’로서 설명하려는 대상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상관없이 양적 데이터만으로 주어진 대상을 본뜨고 예측한다. 이에 비해 복잡계 시뮬레이션 모델은 변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동과정을 통해 주어진 관찰 값을 만들어내는가를 다양한 조합을 통해 실험한다. 시스템 내부의 작동 메커니즘이 이미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작동규칙을 어떤 형태로 바꾸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준다. 복잡계 이론은 창발이 일어나는 시점이나 시스템 변수의 값을 예측하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거시적 변화의 패턴에 관해 이야기한다.¹⁴⁾

이 연구에서는 북한 시장 진화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진 회의와 복잡계 방법론 및 북한 경제 부문의 전문가 자문회의, 상인 출신 북한 이탈주민 면접, 관련문헌 분석을 통해 북한 시장의 진화단계와 시장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북한 시장내 행위자들의 역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진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복잡계 전문가가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북한 시장 진화 모형을 구축하는데 기본이 되는 각종 변수와 행위자 규칙을 추출하고 모형화에 필요한 기본 가설을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북한 시장의 역사적 진화과정을 고려한 몇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자바(JAVA)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Anylogic’ 툴로 모형을 시각화한 후 가상 데이터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모형을 보완하고,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14) 김정욱·윤영수, “복잡계이론에서 예측·통제·적응의 문제” 복잡계 네트워크, 『복잡계 워크숍』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p. 562.

2. 정상국가화 과정으로서의 시장화와 체제전환

가. 수요 및 공급적 측면에서의 북한의 시장화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를 과연 자본주의 시장질서로의 이행 징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잠정적 결론은 북한 지역에서는 비록 수요적 측면의 행위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화는 비교적 규모있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에 기반한 공급적 측면의 시장화, 즉 체제전환¹⁵⁾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 내의 시장화 현상이 북한 경제 전반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또한 시장화는 기본적으로 행위자, 즉 주민들의 개별적 속성과 개별 주민간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는 수요 측면에서 북한의 시장화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이후 시장참여자의 자기조직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식량난으로 인한 배급제의 마비는 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를 선택하게 만들었고, 주민들의 경제활동의 터전은 공장에서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시장화는 곧 사적 영역의 확대와 개인이 점유하는 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관계 중심의 관계망 확대를 의미했다. 북한에서의 시장화는 또한 시장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자유결정, 시장참여와 시장활동에서 일어나는 제반행동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이 자유결정의 영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편 공급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에서 비록 행위 주체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적 측면의 시장화는 비교적 규모있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에 기반한

15) 경제체제전환(economic system transformation)이란 기본적으로 한정된 지역(국가)에서 기존에 유지되어 있던 경제질서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규의 적용이 무효화되고, 다른 경제적 질서나 법규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체제는 경제적 질서나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원칙, 즉 생산, 소비 및 소득분배와 관련되는 의사결정과 이의 수행을 위해 마련된 기구(mechanisms)와 제도(institutions)의 총체다.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제도적 기구(institutional mechanism)의 총체가 경제체제를 이룬다고 할 때, 경제체제전환이란 제도적 기구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사회주의 경제를 이루는 제도적 기구의 전환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도입·시행됨을 의미한다. 즉 경쟁가격형성으로 자원의 최적배분을 이룰 수 있는 가격 자유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유로운 시장참여와 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장의 자유, 사유재산제도로써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시장활동으로부터의 이익과 잉여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해외무역과 자본이동이 국가독점에 의하지 않고 개별 경제주체에 의해 자유롭게 수행되는 대외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공급적 측면의 시장화, 즉 체제전환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에 전체주의적인 위계질서에 의한 폐쇄적 정책결정구조가 지배적이며, 국가정책이 자의적으로 결정·집행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의미에서의 정치체제는 작동하지 않고 통치체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계 이론에서 설정하고 있는 정상국가 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의 통제와 사회적 무질서 그리고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상황 속에서 북한 행위자들은 새로운 행위패턴을 구축하고 자기조직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창발하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각자 생존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통해 새로운 관행을 습득해 나가고 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타자와의 동조와 연대와 같은 행위 양식을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집단간의 자기조직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자기조직화는 다시 반체제 기반으로 조직화될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치적 세력으로 발전되어갈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나. 체제전환 사례와 북한

체제전환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변혁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일당독재가 붕괴되고 다원적 민주체제가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는 중앙의 관료적 결정에 의지하는 계획경제가 각 경제주체의 독자적 이익과 효율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의식과 가치관, 행동 규칙의 전반적 전환을 요구한다.¹⁶⁾

동유럽 각국은 스탈린식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국의 사정에 맞춰 개혁을 실시했다. 이들 국가들의 개혁 노력은 국제적 환경에서 소련의 정치적 이완 현상과 맞물려 지배집단의 균열과 세력약화 현상을 가져왔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을 통해 민주적 리더십을 확립했으며, 정치 활동의 자유와 시민권의 보장을 이루어냈다. 민주정치와

16) Piotr Sztompka, "Looking Back: the Year 1989 as a Cultural and Civilizational Break,"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9, No. 2, (1996).

인권, 언론의 자유, 법이 지배하는 사회로 전환되었다. 경제개혁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이다. 즉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는가, 그 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 체제전환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체제전환의 ‘초기여건’도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⁷⁾ 왜곡된 경제구조, 초기의 물가수준, 법치주의의 가능성과 같은 여건들이 체제전환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¹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정도 면에서는 미약하나 체제전환적 차원에서의 개혁을 시도하고 이를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2002년 실시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2003년 3월 시행된 ‘종합시장’의 도입은 이미 확산된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시장’이라는 제도를 계획과 연계시키려는 수단이었다.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은 경제개혁·개방과 관련된 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그 중에서는 체제전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제·개정된 주요 법률 중 2004년 이후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39개에 이른다. 이 중 경제·과학 분야 29개, 사회분야가 6개로, 법적 정비작업은 경제 분야에 집중되었다. 북한은 경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시장경제체제의 요소를 제한적이거나 도입,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각종 보조금을 폐지하고 예산제 기관을 축소하며, 새로운 재정 수입 항목을 신설,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시장원리를 반영, 국가 및 기업에 대한 재정구조 및 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농업법」 개정 등을 통해 농업생산 활동의 효율성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유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제적 일탈행위 방지 및 상거래

17) DeMelo, Martha·Denizer, Cevdet·Gelb, Alan·Tenev, Stoyan, “Circumstance and Choice: The Role of Initial Conditions and Policies in Transition Econom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October 1997), p. 26.

18) 포포프(Popov)는 경제구조의 왜곡과 물가수준, 그리고 법치주의(rule of law)적 환경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경제성장률 변동의 80%를 설명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Vladimir Popov, “Shock Therapy Versus Gradualism: The End of the Debate (Explaining the Magnitude of Transformational Recession),”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42, No. 1 (2000) p. 42.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한편, 남북교역, 대북투자 등과 관련된 협력사업에서 신청, 승인, 반·출입 승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검역, 통관, 결제 등의 필요 절차를 규정하고 일원화하는 등 대외 및 대남 경협과 관련해서도 변화에 접근하고 있다.

북한 정권과 지배계층은 물리적 강제력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래로부터 확산되는 시장화의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에 순응하여 사회통제에 앞장서면서도 행위주체자인 주민들과 공생하는 방향으로 자기조직화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¹⁹⁾ 만성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동원자원이 결핍된 상태에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될 수도 있다. 기득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행위자 네트워크가 체제 개선적 성향을 띠게 될 경우, 개혁·개방을 주도, 베트남이나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과 같은 과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집단간의 자기조직화가 발전하게 되면, 기존의 제도나 구조와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는 바로 제도와 구조의 진화로 이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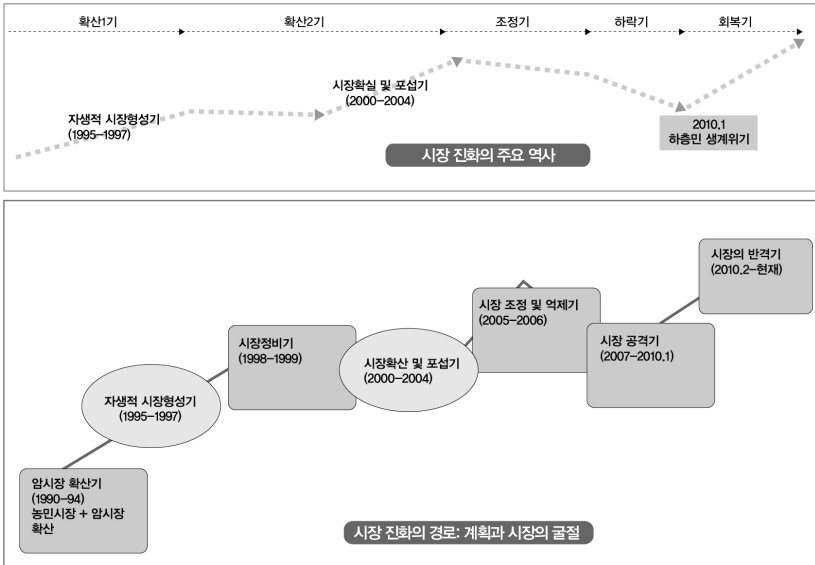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볼 때 만약 북한 사회주의 경제가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시장경제로의 창발로 이어질 경우, 시장 관련 행위자들의 체제전환에 대한 강한 요구가 나타남으로써 결국 계획자가 그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 다시 말해 체제 이행의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북한은 정상국가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3. 북한 시장의 진화경로

1980년대 북한 시장 진화의 환경이 조성된 이후 2010년 말 현재까지 북한 시장 진화의 복잡적응 경로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III-1>과 같다.

19)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p. 19.

<그림 Ⅲ-1> 북한시장의 진화: 복잡적응 경로



북한에서 시장이 계획경제 시스템 내에서 적응하면서 양자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해온 과정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980년대 시장 진화의 환경 조성기이다. 둘째, 1990년~1999년까지로, 북한 시장의 진화 1기이다. 셋째, 2000년~2006년으로, 북한 시장의 진화 2기이다. 넷째, 2007년~2010년 말 현재까지로, 북한 시장의 진화 3기이다.

가. 시장 진화의 환경 조성기: 1980년대

1980년대까지는 시장 진화의 환경 조성기에 해당한다. 1970년대 말부터 자재와 전력, 원료 부족 등으로 공장·기업소의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1980년대 초중반부터 소비재 생산기관 가동의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북한 곡물생산의 정체가 나타났다. 이 시기부터 국경연선 지역에서는 배급제가 불안정하게 운영되었다. 식량부족 및 배급제 불안정성 증대와 함께, 주민들이 사적인 경작 활동으로 생산한 식량을 사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초보적인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식량의 사적인 유통과정에서 농민시장이 확산되면서 열흘에 1회 개장하던 10일장이 매일 열리는 일일시장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중반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민시장이 활성화 되었다.

나. 북한 시장 진화 1기: 1990년~1999년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시기는 시장 진화 1기에 해당한다.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사적으로 작물이나 보조 식량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농민 시장이 확대되자, 북한 계획당국이 사적인 생산과 시장거래를 주기적으로 억압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한편으로는 자생적인 시장거래가 확산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억제하는 각종 ‘비사회주의 검열 그루빠’ 활동 역시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농민시장 내 물품 거래 및 운영이 암시장 형태로 확산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전환으로 인해 사회주의 무역질서가 붕괴되었고, 이는 사회주의 보호경제시스템하에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자재·원료·전력·식량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충당하던 북한 대외 계획경제 시스템에 큰 타격을 주었다. 거기다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연속해서 가뭄, 수해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1990년대 중반, 국가의 식량배급이 전면 중단되고 아사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국가의 경제운영 능력 자체가 마비상태가 되고,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통제 역시 마비상태가 되었다. 그 결과,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자구적 시장거래가 전면화되기에 이르렀다. 암시장이나 농민시장의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시장거래는 이제 기존의 계획경제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질서로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양상으로 나아갔다.

이 시기 북한 당국은 주민 및 기업의 자발적인 시장화를 한편으로는 용인하면서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제도와 경제주체들의 행위 양식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경제주체들의 시장거래는 많은 경우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공식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감독기관은 이를 암묵적으로 허용하였다.

그 결과 시장은 발달해 가지만, 그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형적인 시장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전국적인 단일 가격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거래의 여지가 많았다거나, 기업간의 거래는 화폐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물물교환이 주된 형태가 되는 등 제한적이고 퇴행적인 시장거래가 확산된 것이다. 이 시기 시장은 양적으로 팽창하였으며, 거래품목도 식량 등 농산물 중심에서 거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생산재 및 공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도 상당부분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게 되었다.

이 시기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 농민시장의 판매주체는 협동농장과 농민, 소비주체는 개인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불법거래가 성행하면서 거래대상이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무역회사를 비롯한 북한의 기업들이 자체자금으로 마련한 물건을 시장에서 처리하고,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기업형태의 무역회사 이외에도 투자자로서 돈주, 거래주체로서 도매상인 및 소매상인 등 중소기업자로서 가내작업반 및 군(郡) 단위 지방공장 등의 시장주체가 형성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북한 시장시스템의 진화가 시작되었다.

다. 북한 시장 진화 2기: 2000년~2006년

1990년대 말까지 북한 시장의 진화는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기형적인 형태로 확장되어왔던데 비해, 2000년 이후에는 위로부터의 북한 정권 및 계획당국의 시장 제도화와 아래로부터의 자생적인 움직임이 상호작용하였다. 그 결과 군수 및 당의 계획경제 시스템과 함께 경제시스템의 한 축으로 북한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자리잡았다. 본격적인 시장 진화가 전개된 것이다.

이 시기 시장은 북한 경제시스템 뿐만 아니라 다수 주민의 생존 및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주도하는 당 및 군수경제 중심의 계획경제는 여전히 시장시스템을 공식적으로는 제도화하지 않았다. 북한 체제내 경제시스템 운영의 현실과 정책간의 괴리가 심화된 것이다. 역으로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시장경제 행위가 사실상 아래로부터 무정부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가 계획당국의 개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계획당국이 다시 주민들의 일상경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

무였을 것이다. 계획당국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다시 시장을 불법화시키고,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북한 계획당국의 역량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북한 당국은 일단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국가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장경제를 체계내로 인입함으로써 계획경제 시스템의 새로운 출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 기존 대안의 사업체계에 기초한 전일적 계획경제 시스템은 자력갱생과 독립채산제에 기반한 시장과 계획이 제도적으로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그 상징적 계기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제’이다.

시장시스템이 북한 경제의 주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주체들의 경제행위가 불법 영역에서 합법의 영역으로 이전되었고,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인 행위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도 하였다. 종합시장이 늘어나고, 시장의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화폐를 매개로 한 생산재의 거래가 보편화되는 등 질적으로도 심화되었다.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을 조직하는 가내 수공업 유형의 생산이 확대되어 나갔으며, 사적 자본이 기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등 시장의 질적 발전도 이루어졌다.

한편 시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된 시장의 진화는 북한사회에 재산 규모를 중심으로 한 사회균열을 초래하였다. 주민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매점 행위가 증폭되는 등 시장의 부정적인 측면 또한 확산되었다.

북한에서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당국의 간섭과 감시도 강화되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 시장을 통해 세금이 징수되고 있는데다가, 시장행위 단속이 간부들의 불법적인 수입원이기도 하므로 통제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북한 당국의 경제 장악력과 대국민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더욱이 시장을 통해 비사회주의적인 경제행위 뿐 아니라, 북한체제와 정권을 위협하는 각종 정보가 공공연히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2005년 이후 한편으로는 시장을 억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으로부터 계획부문으로 강제적인 물자 이전을 시도하였다. 이는 과거 현실사회주의 경제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이른바 역개혁의 양상이었다. 북한당국은 시장의 활성화

회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부분적으로 다양한 규제를 시도하였다. 2005년 10월부터 배급제 복귀, 만40세 이하 장사 금지, 공산품 시장 판매 금지, 1일장(1일, 11일, 21일 개장)으로 전환 등 시장통제 조치를 했다. 또한 2006년 개인고용금지 등 노동시장 통제정책을 실시했으나, 아래로부터의 시장 진화 동력에 밀려 효과를 드러내지 못한 채 각종 통제 조치들이 무력화되곤 하였다.²⁰⁾

라. 북한 시장 진화 3기: 2007년~2010년 현재

2005년 이후 시장경제를 통제하는 북한 정권의 각종 시장 통제정책이 현실에서 무력화되면서, 시장시스템 진화로 인한 체제 위협감은 더욱 증대하였다. 북한 시장의 진화 3기로 명명할 수 있는 2007년부터 2010년 말까지의 시기는 북한정권이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단행하다가, 2010년 1월을 기점으로 정권의 통제에 대한 시장의 반격이 시작되어, 2010년 말 현재까지 북한 시장의 아래로부터의 창발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이다. 시장에 대한 정권의 공격의 계기는 2007년 4월 시장시스템의 도입을 주도했던 박봉주 총리가 숙청되고 김영일이 총리로 임명되고, 2007년 10월 장성택이 중앙당 행정부장에 임명된 것이다. 2007년부터 북한 기업의 시장 관련 활동을 폐지하고, 소도시 경작을 억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보안기관과 연합그루빠 등을 통해 비사회주의 서식장이라 명명한 시장과 시장의 행위주체에 대한 공격인 ‘비사검열’이 강도높게 진행되었다.²¹⁾ 2008년도에도 하급단위의 군부 무역회사를 비롯하여, 국경연선에서의 각종 무역회사에 대한 검열이 강력하게 진행되었다.²²⁾ 시장 공격은 국영상업망의 강화를 통한 시장억제 및 노동자의 공장복귀를 유도한 2009년 시장활동의 억압과 ‘혁명적 대고조’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도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2009년 말 실시된 화폐교환

20) 박영자, “2003년 <종합시정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3호 (2009).

21)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007~2009년 각호).

22) 2007년 12월 23일 김정일의 방침에 따르면, 군부대 명칭으로 된 무역회사들과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무역회사들을 일체 재정리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 1일 중앙당과 내각은 “모든 군부대들에서 군 부출장소와 군부 산하 외화벌이 회사를 없애고 강성무역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기구를 줄여야 하며, 지방에서는 군부보다 당 기관을 우선 내세워야 한다”는 방침을 하달했다. 박형중 외,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36.

조치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북한의 계획부문의 여력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장통제정책을 계속할 경우 전체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매우 격렬하고 분절적인 기존 시스템의 붕괴와 새로운 시스템의 등장으로 연결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더욱이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중류층 주민들의 소비능력이 바닥나고 생산여력이 고갈되면서 급격한 체제이반 현상이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되자 2010년 초에 북한당국은 다시금 시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

시장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북한정권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아래로부터 자기조직화의 동력을 가지고 진화하던 시장원리에 의해 패배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무력화되곤 하였다. 예를 들어 2009년 북한정권의 시장 통제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창발현상을 보였다. 첫째, 운영시간 및 장사 단속에 대응해서는 종합시장 밖으로 이동하여 골목장사나 손수레 장사, 메뚜기 장사를 하며 시장행위를 지속하였고, 둘째, 장사물품 단속에 대응해서는 물건 품목을 적은 표지판 등을 들고 손님을 유인하여 가정집에서 판매를 하였으며, 셋째, 장사 나이 제한에 대해서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를 대동하고 장사를 하거나 나이든 여성과 동업을 하거나 함으로써 계획경제의 통제시스템과 조율하였다. 이에 따라 메뚜기 장사, 방문판매가 성행하였고, 청진시 여성 상인들은 집단적인 항의를 하였으며, 시장 단속일꾼들과 마찰이 급증대하고 국경연선지역 주민들은 엄중한 감시망에서도 탈북을 시도하곤 하였다.²³⁾

4. 복잡계 모형을 활용한 북한 시장 진화 시뮬레이션

이 장에서는 일련의 북한의 시장 진화동학을 복잡계 연구방법론의 하나인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 ABM)을 이용하여 구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한 시장 변화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행위자기반모형은 기본 구성요소가 행위자인 모형이다.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을 모형화

23)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00호 (2009.10.13).

하고 그러한 상호작용의 결과 그들의 총합인 시스템 전체 차원에서 어떠한 동태적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행위자 기반 모형을 통해서도 시스템 변수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시스템 내 행위자들의 분포의 변화, 이들 간의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 등 시스템의 진화경로를 예측해볼 수 있다.²⁴⁾

가. 시장 진화 시뮬레이션 모형의 특징과 주요 요소

(1) 모형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 하에 복잡계 방법론을 활용한 북한 시장 진화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현하였다. 첫째, 1990년대 이후 배급제에 근간한 경제 시스템의 붕괴에 따른 자생적인 시장 발전 양상을 추상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둘째, 시장질서 형성으로 인한 공공관료 행위자의 수직적 통제의 이완과 시장 활동의 강화피드백(reinforcing feedback) 양상을 재현하는 것이다. 셋째, 일정 정도 시장이 발전한 상황에서 체제 환원을 위한 역개혁 조치에 순응하지 않는 시장 진화의 비가역성을 행위자 수준의 동학으로 이해하는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2) 모형의 행위자 및 통제변수

본 모형에서는 공공관료 행위자와 민간주체 행위자라는 두 개의 계층으로 구성된 행위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공공관료 행위자는 당·정부·군부·국영기업 등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정치자본을 소유한 체제관리층이다. 현실에서 민간주체 행위자와 공공관료 행위자는 다양한 경제활동에 종사한다.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공공관료 행위자는 생산·분배활동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민간주체 행위자는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공급한다. 그러나 모형의 목적과 현실적 구현의 제약상 이들의 활동은 필요 재화의 분배 부분에 집중한다.

각 행위자들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소요량을 공급받는다. 식량과 생필품의 단위는 기존 북한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당시의 공급량을 1단위로 잡는다. 식량공급이 부족하여 특정량 이하로 떨어진 상태가 지속되면 행위

24) 김창욱·윤영수, “복잡계이론에서 예측·통제·적응의 문제,” p. 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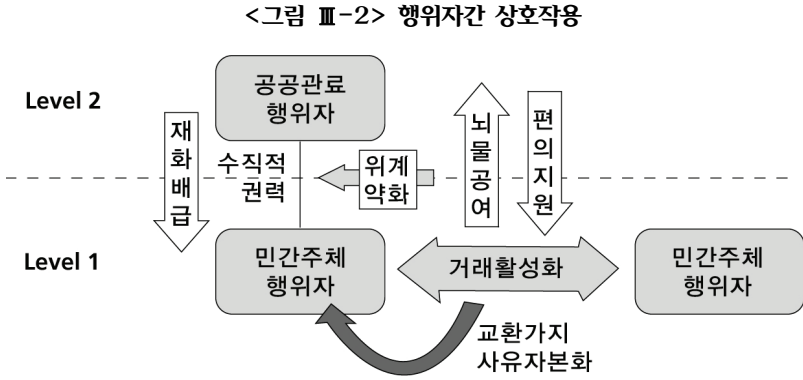
자는 사멸하게 된다.

경제시스템을 형성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가는 기초는 행위자의 행태와 이를 통한 상호작용이다. 이 행위자들의 행태의 이면에는 동기(motive)가 작용한다. 이 모형에서 행위자는 두가지 행동의 동기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재화 획득이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 이상의 식량 공급이 필요하다. 식량공급이 줄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작용할 경우에 행위자는 자구책을 마련하게 된다. 상층에서 하향 배급되는 식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평적인 교환을 통해 획득하려는 행위 유인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물리적 공간상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잉여식량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민간주체 행위자와의 수평적 교역을 추구하게 된다. 수평적 교환을 위한 가치는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부문내에서의 노동공급을 축소하고, 이 노동력을 다른 부문, 즉 시장경제와 연관된 영역에서 사용하거나, 계획경제부문의 자산을 절취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는 생존이 담보된 상황에서 부가적인 편익 증대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내적(intrinsic) 보상을 중시하고 있으나, 시장경제에서는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이익의 사유화가 허용되면서 외적 보상의 충족으로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행동양식이 발현된다. 모형에서는 이것이 생필품 및 사적 자본의 축적 행위로 나타난다.

공공관료·민간주체 행위자는 배급이 감소할 경우 이 두 가지 동기에 의해 새로운 거래행동에 나선다. 일단 민간주체 행위자들 사이의 수평적 거래행동이 활성화된다. 환경상에서 인접한, 즉 거래망이 형성된 경로를 따라 행위자의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 거래의 우선순위는 생존수요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며, 이후 거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 필수 식량 수요가 충족되면서 부가적인 편익 증대를 모색하게 된다.

동시에 이는 공공관료 행위자와 민간주체 행위자와의 거래관계도 발전시킨다. 공공관료는 운송수단, 통신 등 거래에 필요한 서비스의 활용 권한이나 제도적 단속 및 인허가권 등의 형태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주체 행위자들은 수평적 거래를 통해 획득한 자본과 재화를 이들에게 공여함으로써 거래의 편익을 도모한다. 즉 공공관료 행위자의 권력과 민간주체 행위자의 자본 사이에도 수직적 거래관계가 발전한다. 이러한 거래로 촉발되는 행위자

간 상호작용은 <그림 III-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행위자간 상호작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유 자본량, 사유 식량 보유량, 사유 생필품 보유량, 편익 등의 행위자 상태변수를 설정한다. 사유 자본량은 화폐자본을 의미하며, 각 행위자는 시장을 통해 자본과 식량·생필품을 상호 전환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식량 보유량은 매 시기별로 각 행위자가 보유한 식료품 비축량을 의미한다. 생필품 보유량은 식료품 이외의 생필품 비축량을 의미한다. 편익(=f(자본, 식량, 생필품))은 자본, 식량, 생필품의 함수로 표시된다. 식량과 생필품은 개인의 편익에 영향을 주는 기초 소비재 기능과 동시에 보유량이 많아질 경우 '화폐자본'과 대비되는 '상품자본'로 기능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화폐자본의 1단위는 상품자본(식량) 1단위와 교환된다고 가정한다.

(3) 모형의 환경(environment) 및 척도(scale)

모형의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마다 통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배급부족도와 체제억압도라는 두 가지의 종합 통제변수(aggregate control parameter)를 설정하였다. 배급부족도는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배급량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배급부족도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배급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0, 배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1로 표시된다. 배급은 두 개 재화(식량·생필품)에 대해 이루어진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나, 시나리오 검증을

위해서는 편의상 두 재화 모두에 대해 기본 소요량 대비 배급량 비율을 배급 부족도라는 단일변수로 동일하게 변화시킨다.

체제억압도는 북한 당국이 시장경제활동을 억압하는 수준을 종합한 통제 변수이다. 체제억압도는 0부터 10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0은 자유시장경제이고 10은 최고 수준의 억압이 이루어져 행위자간의 수평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본 모형에서의 체제억압도는 민간주체 행위자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설계했다. 북한의 초기 상태는 배급부족도 0, 체제억압도 8인 상황으로 설정했다.

본 모형의 환경은 북한의 행정구역 체계에 근거한 물리적 공간의 축소판으로 구현하였다. 현재 북한 전역에 300여개의 종합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작동하고 있는 주요 시장을 모두 모형의 틀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인 군청 소재지에 한 개의 시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들은 중국에서 유입되는 재화가 우선적으로 집결된다고 알려져 있는 신의주·평양·청진·함흥 등 권역별 주요 도매시장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북한·중국 교역을 통해 유입된 물자는 국경지대 거래시장 → 권역별 도매시장 → 지역별(군·구역별) 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유통경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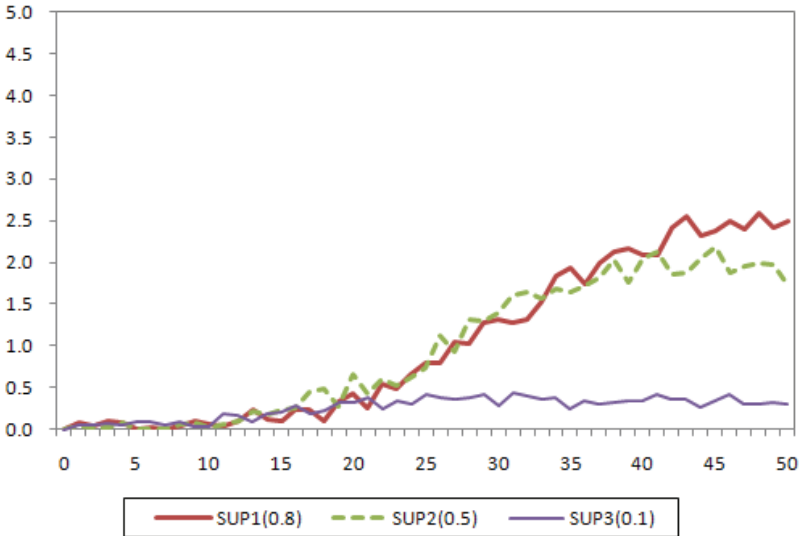
모형에서는 본질적으로는 인접한 공간에 위치한 거래 상대방을 무작위로 지정하여 보유한 자본·식량·생필품과 교환수요에 따라 거래가 성사되는 것으로 구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별 민간주체 행위자가 보유한 자본이 성장해 가면 상대 행위자와의 거래량도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보다 많은 탐색 및 운송비용을 동시에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관련 서비스는 북한 실정상 민간에서 공급받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요를 각 노드(node)에 위치한 공공관료 행위자로부터 조달한다고 가정한다. 공공관료 행위자는 민간주체 행위자와 달리 네트워크에서 링크를 따라 이뤄지는 수평적 거래관계를 가질 수 없으며, 행정단위와 일치하는 각 시장에 위치한 민간주체 행위자와의 수직적 거래관계만을 가진다고 본다.

나. 시장 진화 시나리오 검증

(1)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은 주민들에 대한 배급이 기본 식량 소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 충격으로 시장이 확산되어 나가는 경우에 관한 시나리오이다. 여기서는 시장에 대한 강한 통제(체제역압도 8)의 수준을 유지한 채 일정 시점(t=10)에서 배급량을 급격히 감소시킨 후에 일인당 시장 교역량과 식량배급량의 추이를 관찰한다. 또한 배급량 감소 정도에 따라 시장 교역량과 식량배급량의 추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한다. <그림 III-3>은 SUP1은 배급량이 기준 식량 소요량보다 80% 감소했을 경우, SUP2는 50%, SUP3은 10% 감소했을 경우의 일인당 시장 교역량 수준의 변화를, <그림 III-4>는 식량배급량 변화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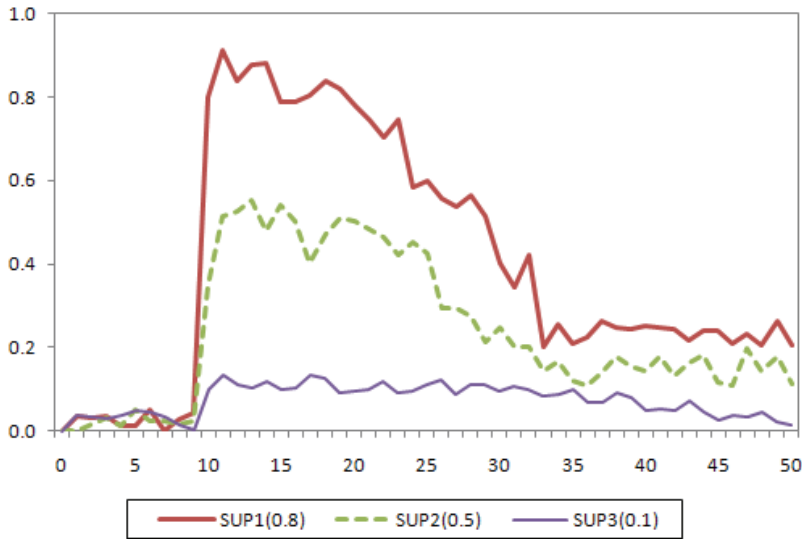
<그림 III-3> 배급량 감소시 일인당 시장 교역량 (시나리오 I)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배급의 부족 상태가 심각할수록 교역량 증가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배급량의 부족분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교역량은 t=15~20의 시점까지 약간 상승하다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필요량의 50% 또는 80%가 배급으로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에는 $t=20$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급 부족률이 50%인 경우와 80%인 경우 $t=35$ 의 시점까지 교역량과 교역량 증가의 속도는 거의 동일하며, 배급 부족률이 클수록 최종 시점에서 교역량은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 배급량 감소시 일인당 식량 부족분 (시나리오 1)



<그림 III-4>의 식량 부족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SUP1, SUP2 상황에서 모두 점차 교역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족분 10% 이하로 감소한다(y축 값이 1이면 전량 부족, 0이면 전량 충족). 이 결과는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간의 수평적 교역을 통해 식량 부족 현상이 완화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식량 부족 현상이 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배급 부족 비율이 큰 경우에 식량 부족 현상이 완화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그래프는 배급 식량이 10% 정도만 부족한 SUP3의 경우, 즉 작은 수준의 공급충격에는 아예 시장 거래행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장에 대한 강한 통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통제를 무력화시킬 수준으로 강한 공급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 활성화 단계에 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기에는 식량 부족량이 이러한 문턱값을 충분히 넘어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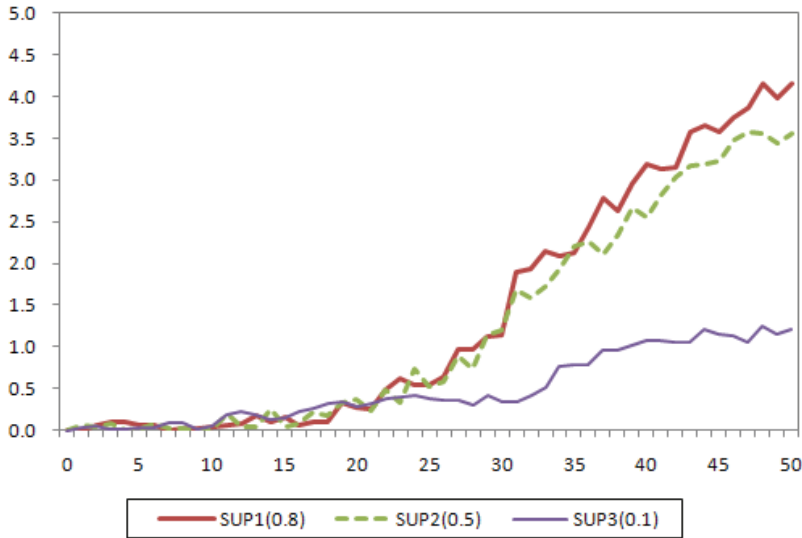
때문에 민간주체 행위자들에 의한 시장 거래행위가 활성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나리오 I은 북한 시장 진화 1기인 1990년대에서 1999년까지, 특히 1995년 이후의 몇 년간 북한에서 경제난과 배급의 축소로 인해 발생한 자생적 시장 형성의 메커니즘을 설명해준다. 배급량의 급락은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여 북한 경제체계를 ‘혼돈의 가장자리’ 상태로 진입하게 만든 요인이 된다. 이 시기에 기존의 경제시스템에 변화를 야기하는 새로운 강화피드백이 형성된다.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배급량의 급감으로 인해 개별 행위자들은 식량 부족이라는 생존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한편에서는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 행위자들 간의 수평적 교환, 즉 상거래 행위가 활성화된다. 행위자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국가 공급체계가 아닌 주민들간의 수평적 교환을 통해 식량을 비롯한 재화를 획득하려는 행위의 유인이 발생한 것이다. 잉여 식량, 또는 생필품을 보유한 민간 주체간의 수평적 교역이 확대되면서, 계획 부문에 대한 노동 투입은 감소되고 대신 시장 부문에서의 노동 투입이 증가한다. 이는 계획 부문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잉여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계획 부문에서의 물자의 절취 현상이 증가한다. 외부 물자의 추가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강화피드백이 형성되면서 시장은 더욱 활성화된다.

(2) 시나리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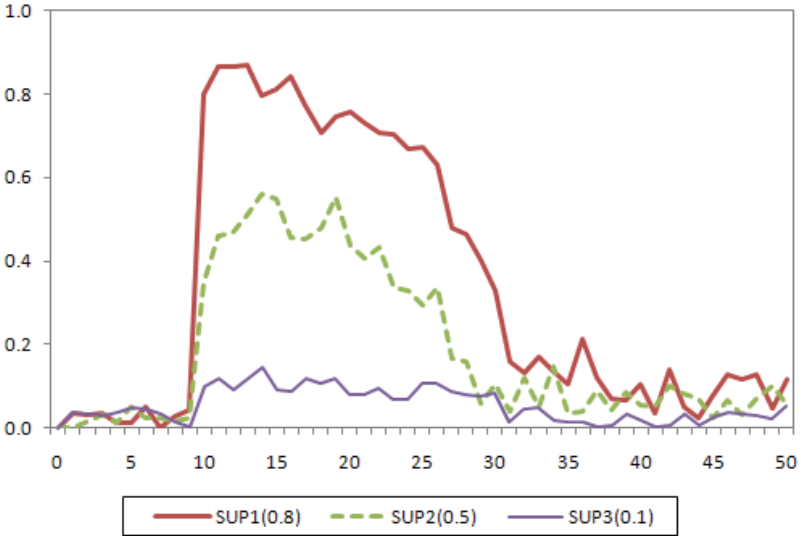
시나리오 II는 국가 배급이 감소함으로써 공급 충격이 가해진 상태에서 국가가 시장 확대를 인정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배급량 감소 설정과 공급 충격이 발생하는 시점은 시나리오 I과 동일하며, $t=30$ 에서 체제역압도를 8에서 3으로 완화하여 시장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을 때의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그림 III-5>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시 일인당 시장 교역량 (시나리오 II)



<그림 III-5>에서 $t=40$ 시점에서의 일인당 시장 교역량을 시나리오 I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배급부족량 80%, 50%, 10%일 경우에 $t=40$ 시점의 일인당 시장 교역량이 시나리오 I은 2.1, 2.0, 0.3인데 비해 시나리오 II는 3.2, 2.5, 1.0으로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제도 억압의 완화는 공급충격이 작은 SUP3의 상황에서도 $t=30$ 을 기점으로 거래 증가를 초래하여, 체제억압도가 완화되는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시장이 일정 정도 팽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배급 부족률이 10%에 불과한 경우에도 발전 수준에 극적인 변화를 보이지는 않으나, 시장의 자생적 활성화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시나리오 II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시장에 대한 제도적 억압요인의 완화가 시장 발전을 크게 견인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림 III-6>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시 일인당 식량 부족분 (시나리오 II)



<그림 III-6>은 배급량이 감소된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다가 일정한 시점에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일인당 식량 부족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장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식량의 완전 수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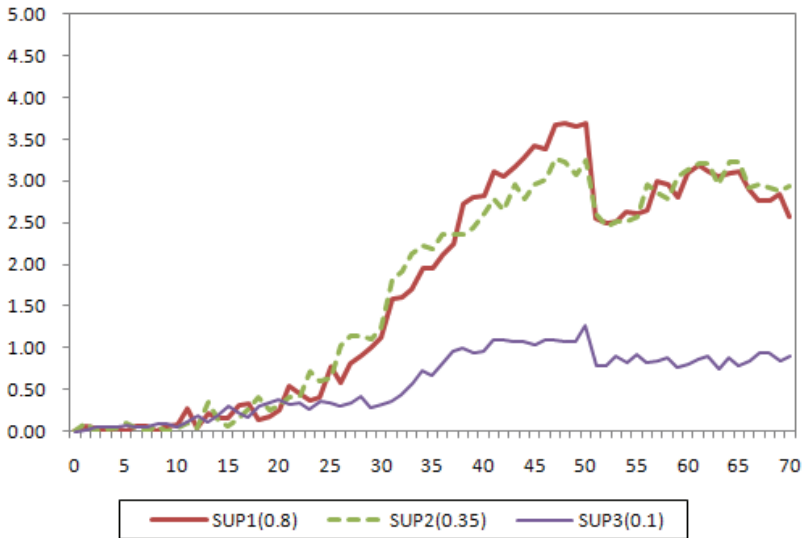
시나리오 II는 북한 시장 진화 2기, 특히 시장 확산 및 포섭기인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시기의 북한 시장 진화 특성을 보여준다. 시나리오 II를 통해 제도적 요인이 시장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t=10 시점에서 취해진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예가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종합시장 허용조치와 같은 제도적 조치이다. 모형에서 공공관료 행위자로 표시된 북한의 관료, 간부계층의 친시장적인 제도적 조치에 대한 이해관계와 반응이 시장의 진화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 주민들에 대한 편취의 구실인 규제가 사라지면 그로 인해 공공관료 행위자들의 편익이 줄게 되므로, 제도 변화를 수용할 유인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공공관료 행위자 입장에서는 체제 억압도를 일정 수준 이상에서 묶어놓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시장 의존적인 생존구조를 유지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장이 지나치게 축소될 경우 공공관료 행위자와 민간주체 행위자간의 수직적 거래관계가 크게 위축되어 공공관료 행위자가 수직적 거래관계를

통해 취득하는 이익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 북한의 경제체제에서는 시장 관련 제도화 및 규제의 수준은 행위자 수준에서 보면 이 두 방향의 힘의 역관계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3) 시나리오 III

시나리오 III은 일정 기간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가 수직적 거래에 의한 체제 결속력 이완을 막기 위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강경조치를 취했을 경우이다. 배급량 감소 설정과 공급 충격, 체제 억압도 완화는 시나리오 II와 동일하며, $t=50$ 시점에서 체제 억압도를 3에서 8로 다시 환원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다.

<그림 III-7>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 후 재강화시 일인당 시장 교역량 (시나리오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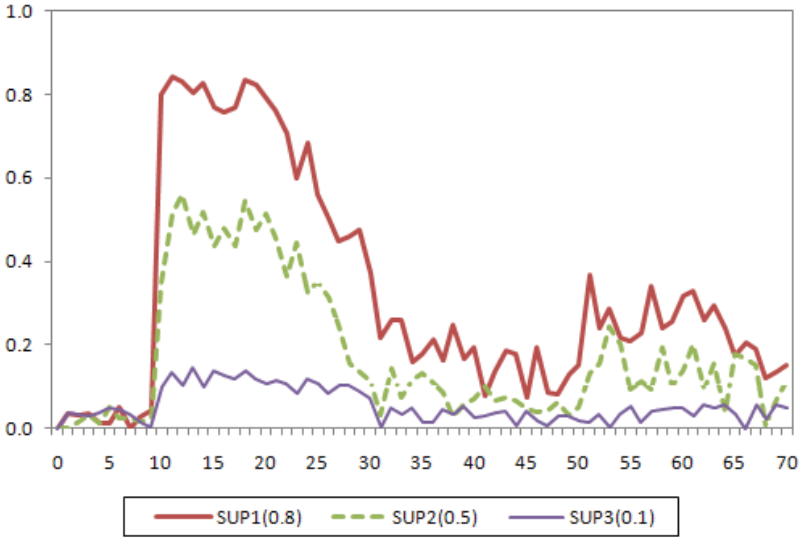


<그림 III-7>을 보면, $t=50$ 시점까지 시나리오 II와 동일하게 시장 교역량이 증가하다가 $t=50$ 에서 교역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제도반동충격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시기에도 이로 인한 불연속적인 교역량 감소가 확인되지만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보다는 $t=2\sim3$ 정도의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반등하여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된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교역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교역량

은 재규제가 가해지기 직전의 교역량보다 약간 적기는 하지만 크게 감소되지는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 III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2009년 말 화폐개혁과 같이 시장이 일단 크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규제라는 충격이 가해질 경우에 시장활동은 일시적으로 위축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충격이 흡수된 이후에는 상당한 정도로 회복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장의 확산이 일단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 이후 시장의 진화는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III-8>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 후 재강화시 식량 부족분 (시나리오 III)



<그림 III-8>은 일인당 식량 부족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장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된 후 식량 부족량이 일시적으로 10~20% 가량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추가 배급이 없는 상황에서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장 거래가 재활성화됨으로써 식량 부족분은 서서히 감소하여 t=70에 이르면 회복세를 보이는 패턴이 나타난다. 그러나 배급 부족량이 큰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식량부족분 그래프가 상당한 진폭의 파동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화폐개혁 이후 북한 시장에서 상당 기간 쌀값의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가격 불안정과 이에 수반되는 주민 생활의 불안정성을 가속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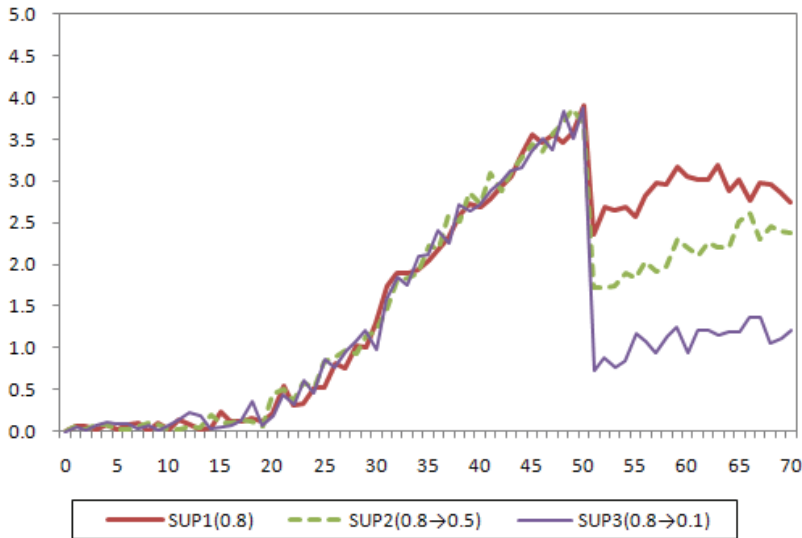
켰던 사태와 같은 것이다.

시나리오 III은 북한 시장 진화 3기인 2007년에서 2010년 말 현재까지의 북한 시장의 진화 특성을 보여준다. 시나리오 II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시장 확산의 임계점을 지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외부적 충격은 시장의 지속적인 축소나 폐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시장은 일정한 조정기를 거친 후 통제 강화 시기보다 약간 축소된 정도의 규모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외부적인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완전히 위축되지 않는 것은 시장을 축소시키려는 당국의 조치에 대한 학습을 여러차례 경험한 시장행위자들이 시장에 대한 통제와 단속 강화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4) 시나리오 III-2

시나리오 III-2는 시나리오 III의 하위 시나리오로, 일정 기간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가 수직적 거래에 의한 체제 결속력 이완을 막기 위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강경조치를 취하면서 배급량을 증가시켜 일정하게 유지했을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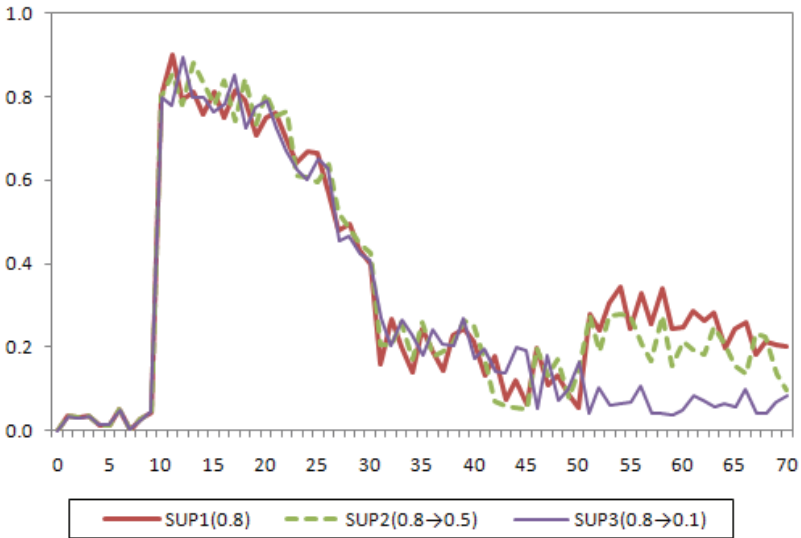
<그림 III-9>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 후 재강화, 배급량 조정 시 일인당 시장 교역량 (시나리오 I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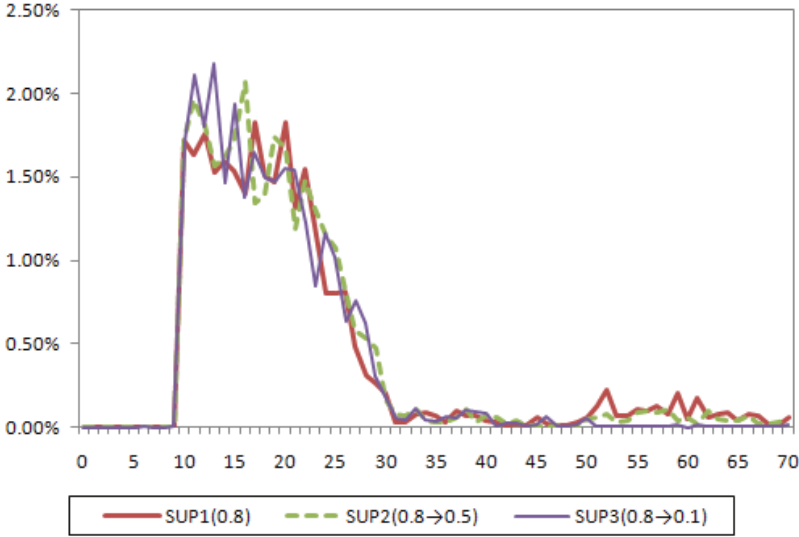
<그림 III-9>로 나타난 시나리오 III-2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여 시장이 팽창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통제를 강화할 때 시장의 위축 정도는 배급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배급 재개시 시장의 위축 정도가 배급량과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배급의 증가가 곧바로 동일한 양의 시장 거래량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시장 팽창 기간에 행위자들의 시장학습 효과와 시장활동으로 인한 기대 소비수준의 증가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III-10>은 이 경우 일인당 식량 부족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시장 통제와 함께 추가 배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배급률이 9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한 기간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II-10>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 후 재강화, 배급량 조정 시 식량 부족분 (시나리오 III-2)



<그림 III-11>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 후 재강화, 배급량 조정 시 아사자 비율
(시나리오 III-2)



<그림 III-11>은 동일한 경우 총인구 대비 아사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아사자 비율은 처음 배급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t=10$ 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시장이 확산됨에 따라 차츰 감소하고, 규제 완화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t=30$ 이후에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다. 통제가 다시 강화되는 $t=50$ 이후에는 단기간의 급증과 일정 수준의 아사자 비율 유지가 반복되는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위의 그래프에서 y값은 아사자 비율이므로, 특정 기간의 아사자 수는 그 기간의 그래프와 밑면, 즉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이다. 따라서 $t=10$ 시점에서의 북한 인구를 2천만 명으로 가정하면 그래프 상에 나타난 아사자 수는 440만 명($20 \times 20,000,000 \times 0.022 \times 0.5$)으로 추산된다. 이 모형은 계량적 수치의 조절을 하지 못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를 실제 북한의 아사자 규모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그래프에서 $t=10 \sim 30$ 까지의 기간은 배급량이 급격히 감소된 시기부터 시장 활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 시기부터 2000년대 초반의 시장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는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난과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아사자 규모는 추산 기관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난

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 인구추계에 의하면 북한에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난과 기아로 인한 초과사망자는 33만 6천 명 규모이며, 1994년부터 2005년까지의 초과사망자는 48만 2천 명 규모이다.²⁵⁾ 이석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의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63만에서 112만 명으로 추산하였다.²⁶⁾ 북한의 외무성 부상이 언급한 고난의 행군기 사망자 수는 22만 명이며,²⁷⁾ 북한 관련 NGO에서는 150~300만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통계청의 추정치와 이 모형의 그래프에 나타난 값을 비교해보면, 이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사자 규모가 실제값의 10배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역으로 적용하여, 시장 확대 이후 시장 통제가 다시 강화될 경우 아사자 수를 추정해보면, <그림 III-11>에서 배급의 증가 없이 시장에 대한 통제만 강화할 경우(SUP=1), $t=50$ 부터 $t=65$ 까지 지속되는 아사자 수는 약 37만 5천 명($15 \times 20,000,000 \times 0.00125$)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수치조정치 0.1을 곱하면, 통제 강화 이후 기아로 인한 사망이 진정되기까지 일정 기간에 나타나는 아사자 수는 약 4만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해 고난의 행군기를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아사자의 1/1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통제 강화와 함께 필요 식량의 총 50%를 배급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할 경우(SUP=2) 아사자 규모는 3만 명 정도가 될 것이며, 전체 필요 식량의 90%를 배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통제 강화 직후에 약간의 아사자 수가 발생하고, 이후에는 낮은 사망률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 북한 당국이 배급의 전격적인 확대가 수반되지 않은 강력한 시장 통제정책을 시행할 경우 고난의 행군기와 같은 규모의 대규모 아사자 발생은 아니지만, 민심의 이반과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아사자 발생이 일정한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25) 『한겨레신문』, 2010년 11월 23일.

26)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177.

27) 『중앙일보』, 2001년 5월 16일.

(5) 본 연구의 한계와 의의

이 연구에서는 주로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한 시장의 역사적 진화과정을 설명하고 시장 변화의 패턴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 시장 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하는 예측모델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활용한 행위자 상태변수 및 통제변수는 실측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량적 설명력을 확보함에 있어 한계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다룬 북한 시장 진화 모형은 북한 생산시스템까지 포괄하지는 못하였으며, 자본·금융·노동시장을 다루지 못하고 소비재 시장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제 전반의 성장 및 진화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밖에도 북한의 시장 확산과 관련하여 이 모형에 반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주요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주로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북한 내부에서의 교역만을 다루었다. 또한 남한이나 중국, 국제사회의 지원이 시장의 확산 또는 통제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은 현재 대북지원이나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주요한 현안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지 못하였다. 외부의 지원은 물적 토대의 확충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위규칙을 갖는 새로운 시장 행위자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시장 확산 양상에 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북한 사회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장진화 동학을 반영하여 향후 북한의 총체적인 시장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초적 시뮬레이션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모형의 확장 및 정교화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5. 시장 확산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복잡계 이론에 의하면 거시적 경제시스템과 개별 행위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메조(meso) 층위의 두 가지 요소는 제도와 신념체계이다. 이는 북한에서 시장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요소와 의식 및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갖추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미시적인 개별 행위자의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기와 유인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 확산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을 북한의 과제와 남한 및 국제사회의 지원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과제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의 안정적 확산을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각종 규제를 완화·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정상시장에 대한 모든 규제와 통제를 한꺼번에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단계별로 거래의 자율화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시장 가격 안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가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품의 공급과 유통망을 확대하며 가격을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시장에 보다 많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품생산 기업소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넷째, 북한의 체제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체제전환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관계 행위자, 특히 관료자본을 갖고 있는 공공관료 행위자의 시장 친화력 및 시장경제 관련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이들의 시장친화적 동기를 유발하고 시장화를 촉진하는 제도 구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남한 및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북한 시장의 안정적 확대에 필수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본의 유입이 필수적이다. 현재 북한이 경제시스템의 정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은 물질적 토대의 확보이다. 기능적 정합성과 행위적 정합성은 모두 물질적 토대가 갖추어졌을 때 달성이 가능하다. 현재 북한에서는 이를 외부의 원조나 외자유치와 같은 대외부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²⁸⁾ 북한에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은 중국이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의 외부 자본 도입은 시장화의 물질적 토대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시장에 강력한 새 행위주체가 등장하여 시장화의 방향성을 주도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 시장에 대한 우리 자본의 투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특히

28) 김창욱, “북한경제 시장화 연구를 위한 복잡계적 분석틀의 재정립,” 『북한경제리뷰』 (2010년 4월호), p. 41.

소비재 상품 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외부에서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민-민 경제협력 강화이다. 셋째,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면 확대를 통해 시장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시장 중심적인 신념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시장경제 및 경영 분야의 전문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북한 시장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들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4장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제4장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1. 머리말

탈냉전 후,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불량국가와 취약국가, 그리고 실패국가 등 정상적인 모습을 결여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 또는 제재방안에 관한 것이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 외교정책과 더불어 대테러전쟁이 가속화되고, 그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지면서 21세기의 국제정치는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접어들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미국의 비정상국가 담론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방향성을 잃고 있으며, 이라크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상황이 안정될 기미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담론을 경험적 맥락에서 짚어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그동안 몇 가지의 담론에 의해 지배되어왔다. 그 중 하나는 ‘실패국가(failed states)’로서, 이는 비단 북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저개발국에 해당되는 담론이었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본원적인 임무, 즉 국방·경찰·복지·민주주의·인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가제도와 정책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이처럼 ‘국가의 실패’라는 현상은 오랫동안 ‘주권(sovereignty)’이라는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면서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기준이 더 중시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 본 내용은 민병완·조동준·김치옥,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10-16-04)』 연구를 요약한 것임.

국가의 실패는 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주범으로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가의 실패’ 담론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생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질’이라는 구호조차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많은 빈곤국가들은 해외원조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그나마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제적 곤경으로 인해 국가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경제적인 요인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제도적·정책적 한계로 인하여 국가가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켜 국제사회에서는 ‘취약국가(weak states)’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비록 붕괴하지는 않더라도 붕괴 직전 상황에 몰리면서 국가로서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약국가’의 담론은 ‘실패국가’의 담론이나 ‘국가의 붕괴’ 담론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국가의 실패’ 담론과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안보 및 외교정책 차원의 이슈 역시 오늘날 국제정치의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안보차원에서는 내전과 테러에 희생양이 되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국가의 실패’에 버금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국가들 중의 일부는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테러범들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국가들을 별도로 지칭하여 ‘불량국가(rogue states)’로 부르고 있다. 불량국가들은 대부분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의 주요 규범들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경제적인 취약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실패’에 관한 제1차년도 연구에 이어 ‘취약국가’와 ‘불량국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자리매김 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탐구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사회의 불량국가에서 나타나는 행태적 속성들을 짚어보고, 이들이 어떤 국제규범에서 문제시되는지, 미국 중심의 패권체제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불량국가들이 민주주의 등 국내적 속성에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취약국가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살펴보고, 특히 불량국가에서 나타나는 취약국가의 속성을 함께 검토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비정상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특성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도 진단하고자 하며, 이들과 국제사회의 상호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살펴본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

2. 불량국가의 군사적 측면

가. 불량국가의 분류기준

현대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비정상성’ 수준을 기늴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비정상 여부와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국제(관습)규범의 준수를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꼽을 수 있다. 국제(관습)규범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형성되었지만, 국제사회에서 대량살상무기금지, 테러금지,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제(관습)규범, 경제규범 등 몇 가지 국제(관습)규범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국가의 비정상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테러금지, 대량살상무기금지, 인권보호 관련 국제규범을 검토한다.

(1) 테러금지규범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위협한다. 첫째, 국가의 지원에 의한 테러는 내정불간섭 원칙을 위반한다. 16세기 서양에서 종교개혁 이후 종파 선택을 둘러싼 갈등은 30년 전쟁과 같은 전쟁을 거치면서, 종교 문제에 관하여 외부의 개입을 금지하는 관행을 만들었다. 둘째, 국가의 지원에 의한 테러는 전쟁법을 위반한다. 전쟁이 국가정책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인정을 받던 시기에서도 민간인을 전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관습은 국제사회의 강행규범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 규범은

민간인을 전투 행위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성문법으로 발전되었다. 국가에 의한 테러는 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피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전쟁법을 위반한다. 테러는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피해를 통하여 국가 행동의 변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국가의 지원에 의한 테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과 의정서를 발전시키고 있다.

<표 IV-1> 테러 수출에 관여하는 불량국가

국 가	기 간	사 유
쿠바	1982~현재	테러 단체에 피난처 제공
이란	1984~현재	테러 단체에 피난처 제공 테러 단체 지원
이라크	1982~2003	위와 동일
리비아	1979~2006	위와 동일
북한	1987~2008	테러 단체에 피난처 제공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시리아	1979~현재	테러 단체에 피난처 제공
수단	1993~현재	위와 동일
아프가니스탄	1996~2001	위와 동일
남예멘	1979~1990	위와 동일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 various years,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 핵확산금지규범

핵무기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첫째, 핵무기는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할 수 없는 무기라는 점에서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하는 전쟁법과 양립하기 어렵다.²⁹⁾ 둘째, 핵무기는 과도한 피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전쟁법의 비례성 원칙과 양립하지 않는다. 핵무기는 파괴력 측면에서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무기로써 효과적이지 못하다. 셋째, 핵무기는 영토와 독립을 위협하는 위협 또는 폭력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연합 헌장 2조 4항과 양립

29)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July 8, 1996).

하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써 전쟁을 불법화시켰다. 정책수단으로써 전쟁이 불법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핵무기의 사용과 위협은 당연히 불법적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는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

<표 IV-2> 핵무기 확산에 관여하는 불량국가 (1970년 이후)

국 가	핵무기 프로그램	사실상 핵무기 보유	핵실험
남아프리카공화국	1971~1990	1979 ~ 1991 (자체 폐기)	
인도	1972~현재	1988~현재	1974, 1998
파키스탄	1972~현재	1987~현재	1998
북한	1982~현재	1994~현재	2006, 2009
유고슬라비아	1982~1987	해당사항 없음	
대만	1967~1976		
한국	1971~1975		
이란	1974~1978 1984~현재		
이라크	1973~2002		
아르헨티나	1976~1990		
브라질	1978~1990		
루마니아	1981~1989		
리비아	1981~2001		

자료: Dong-Joon Jo and Erik Gartzke, 2005, Data Notes for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 Quantitative Model.” (available from the authors by requ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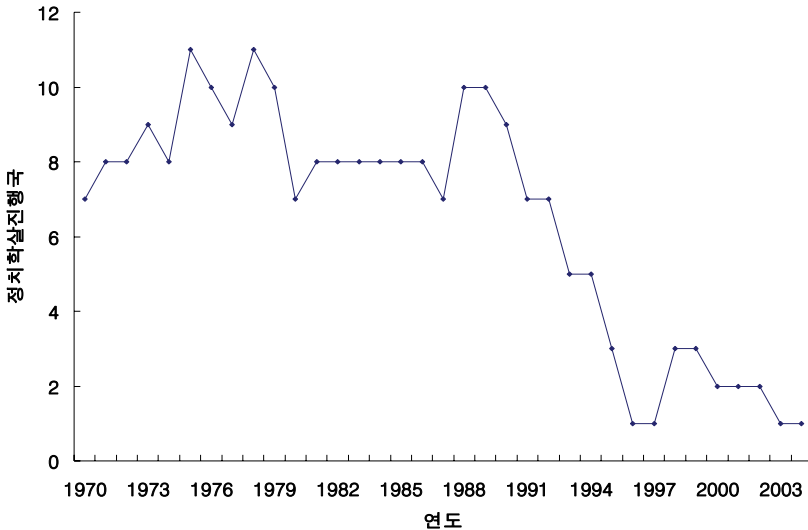
(3) 정치학살을 자행하는 국가

국제사회에서 ‘불량정권’이라 함은, 국제질서에 도전하지는 않더라도 집단 학살에 근접할 정도의 박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차별, 부패 등 국가주권의 이름으로 만행을 자행하는 정권을 지칭한다.³⁰⁾ 이들 정권은 통상적인 독재나 압제의 수준을 넘어 국내에서 특정 사회세력을 조직적으로 박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 또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초래하고 있다. 인권보호가 국제규

30) Washington Post Editorial, “Rogue Regime,” *Washington Post* (April 3, 1979), p. A18.

범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국내적으로 인권을 조직적으로 탄압하는 국가가 ‘국제규범 위반국’으로 규정되었다.

<그림 IV-1> 불량정권(정치학살을 자행하는 나라)의 추세



자료: Political Instability Task Force, “Genocide and Politicide,” *State Failure Problem Set: International Wars and Failure Governance, 1955-2009* (2010).

나. 국제체제와 불량국가

국제사회의 불량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도전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점은, 이들이 국제체제의 ‘구성’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험적으로 보면, 냉전 이후 미국의 패권 아래서 불량국가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1990년을 기점으로 핵무기프로그램을 폐기하는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0년을 기점으로 인종학살 또는 ‘정치학살’을 자행하는 국가도 급격하게 감소했다. 2002년 이후 인종학살 또는 ‘정치학살’을 자행하는 국가로 유일하게 아프리카의 수단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는 곧 미국의 단일패권이 ‘불량국가’의 숫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개연성을 의미한다.

(1) 패권과 동맹국 수

19세기 초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영국이 패권국이었다. 1816년부터 1869년까지 프랑스와 러시아가 영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형국이었고, 1870년부터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독일이 영국 패권에 도전하는 형국이 있었다. 제2차 대전 이후에 들어와서는 미국이 패권국이 되었고, 냉전기 구소련이 미국 패권에 맞섰다. 냉전 이후에는 중국이 잠재적 패권도전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패권국이 상대적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패권국은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동맹국 숫자를 확장시킬 필요가 없다. 반면, 패권국이 강하면, 다른 국가들이 패권국에 편승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패권국의 동맹국이 늘어날 수도 있다. 패권국의 이해와 다른 국가의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패권 강도와 동맹국 숫자간 관계를 예측하기 어렵다.

패권의 상대적 강도는 패권 도전국의 동맹국 숫자간 관계도 예측하기 어렵다. 첫째, 패권의 상대적 강도와 패권 도전국의 동맹국 숫자간 역관계를 가질 수 있다. 패권의 상대적 강도가 높아지면, 패권 도전국을 지지하는 행위가 정치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패권국이 패권에 도전하는 중소국을 공격하는 행위를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패권의 상대적 강도와 패권 도전국의 동맹국 숫자가 정관계를 가질 수 있다. 강력한 패권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패권 도전국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들이 패권국에 대한 균형을 선택할 경우 패권 도전국의 동맹국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2) 미국의 패권과 불량국가

미국 패권의 강도는 ‘불량국가’의 숫자와 역관계, 그리고 미국 동맹국의 숫자와 정관계를 보이고 있다. 미국 패권의 강도는 미국의 동맹국 숫자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관관계가 냉전 후 특수상황을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미국 패권이 강해지면서 국가들이 세력균형을 모색하기보다는 미국으로 편승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불량국가’에게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냉전 이후 미국 패권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가 많은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미국 패권에

맞서는 강력한 도전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곧 대안의 부재를 의미한다. 단일 패권국으로서 미국은 그만큼 ‘불량국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 불량국가의 국내적 속성

(1) 군사화

먼저 불량국가는 정상국가에 비하여 군사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첫째, 군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정상국가에서는 인구 천 명당 현역 군인수가 6.2명인 반면, 불량국가에서는 현역 군인수가 매우 높다. 한편 ‘불량’의 속성 가운데 ‘정치학살’의 특징만을 보이는 국가의 경우 정상국가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테러 수출 또는 핵무기프로그램을 가진 국가에서는 정상국가 현역 군인수의 세 배에 근접하고 있다. 둘째, 불량국가는 정상국가에 비하여 군사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한다. 정상국가 가운데 극단적으로 군사비를 사용하는 상위 5%를 제외하면, ‘정치학살’을 자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량국가로 분류되는 경우에 연간 군사비 평균이 정상국가보다도 낮다. 반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테러를 국가 차원에서 수출하는 이유로 불량국가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연간 군사비 평균이 정상국가의 두 배를 상회한다.

〈표 IV-3〉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현역 군인수 차이

(천 명당 현역 군인수)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4692	6.20	6.83	273.52	0.000	
불량국가	정치학살	175	7.01			9.51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343	16.24			14.52
모든 국가	5210	6.89	8.07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07.

<표 IV-4>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군사비 차이

(단위: 백만 달러; 상위 5% 극단사례 제외)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4240	999.4	1,792.7	96.10	0.000	
불량국가	정치학살	148	594.4			753.2
	핵무기프로그램·테러 수출	329	2,538.1			2,521.0
모든 국가	4717	1,094.0	2,029.5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07.

(2) 정치체제의 비민주성

정치체제의 비민주성과 관련하여, 불량국가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1970년부터 2001년까지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표 분포는 쌍봉형태를 보인다. 불량국가는 정상국가에 비하여 민주주의 평균지표가 낮는데 ‘정치학살’ 자행국이 인권을 유린한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하게 보인다. ‘정치학살’을 자행하는 국가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민주주의 지표가 낮은 수준에 몰려 있다. 반면, 핵무기프로그램 보유국 및 테러수출국의 민주주의 평균지표가 ‘정치학살’을 자행하는 국가의 민주주의 지표보다 높은 현상은 설명이 필요한데, 이는 핵무기프로그램을 가진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향유하면서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극히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다면,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경로에 있는 국가 또는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국가가 불량국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표 IV-5>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민주주의 차이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4417	4.18066	4.25116	94.95	0.000	
불량국가	정치학살	151	0.82119			1.91863
	핵무기프로그램·테러 수출	365	1.89589			3.26656
모든 국가	4933	3.90877	4.21177			

자료: Marshall and Jaggers, 2008.

라. 불량국가의 관계적 특징

(1) 불량국가의 외교행태

국제사회의 ‘기피국가’는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강대국 정치구조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없으며,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사회의 소통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는 국가를 지칭한다.³¹⁾ 기피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기피 대상으로 발전하는 인과사슬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게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현상적으로 기피국가는 외교적 고립과 국제사회의 비난이라는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다. 기피국가는 국가차원의 테러 수출, 핵무기 개발, 내정간섭, 조직적 인권탄압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기피국가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표 IV-6> 국제사회에서 기피국가로 언급된 국가들

사유	기피국
테러 수출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이란, 이라크, 북한, 리비아, 파키스탄, 남아공, 한국, 대만
내정간섭	에리트리아(소말리아 반군지원, 1990-2000년대)
인권탄압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대만(계엄령, 1971~1987), 적도 기니(1969~1979, 1996-현재), 아이티(군부독재+인권탄압, 1991~1994),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스라엘(민족자결무시, 1948~현재), 북한, 리베리아(내전+학살, 1989~2002), 사우디아라비아(종교적 불관용), 남아공(흑백차별+인종자결 무시, 1948~1994), 투르크메니스탄(독재, 1991~현재), 우간다, 우즈베크스탄(1991~현재), 짐바브웨(독재, 1980~현재)

한 국가에 상주외교사절단을 파견한 국가와 전체 국가 간 비율의 분포를 보면, 상주외교사절단 수용이 전무한 국가로부터 거의 모든 국가의 외교사절단이 상주하는 국가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불량국가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불량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거나 테러를 수출한다는 비난을 받는

31) Robert E. Harkavy, "Pariah States and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5, No. 1 (1981), p. 135.

국가들은 오히려 정상국가에 비해 더 많은 상주외교사절단을 수용하고 있다. 반면,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하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거나 테러를 수출하지 않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상주외교사절단이 상대적으로 적게 파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불량국가의 외교적 고립이 인권을 조직적으로 유린하는 국가에게만 해당되는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상주사절을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불량국가에 더 많은 외교사절이 상주한다. 또한, 통상적 인식과 반대로 미국과의 동맹구조 일치도와 국력지표가 상주외교사절 비율과 역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이는 미국과 동맹구조가 유사한 국가와 국력자산을 많이 가진 국가에 외교사절이 상대적으로 적게 상주함을 의미한다. 반면, 무역비중과 민주주의 척도는 통상적 인식과 달리 상주외교사절 비율과 정관계를 가진다.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교사절이 상주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첫째, 잠재적 외교사절수용국 또는 잠재적 외교사절파견국이 불량국가이면 상주외교사절의 수용할 개연성이 높다. 이 결과는 불량국가가 외교적 고립을 당한다는 기존 통설과 배치되는 것이다. 둘째, 잠재적 외교사절 수용국 또는 잠재적 외교사절 파견국의 핵무기 보유, 강대국 지위, 국력 지표, 민주주의는 상주외교사절의 수용 개연성과 정관계를 가진다. 셋째, 잠재적 외교사절수용국과 잠재적 외교사절파견국간 관계의 속성을 측정하는 변수들도 기존 연구결과와 대부분 유사하다. 이 연구결과는 불량국가에 관한 기존 통설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불량국가에 대하여 더 많은 외교사절을 파견함으로써 불량국가와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불량국가와 무력분쟁

지금까지 불량국가는 국제질서에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고 묘사되어왔다. 경험적으로 보면, 불량국가의 군사화 정도가 국제사회의 갈등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불량국가는 정상국가에 비하여 무력분쟁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국력 자원을 많이 가지거나,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거나, 지역 강대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무력분쟁에 관여된다. 동맹국 숫자가 많거나 군사적으로 경쟁하는 국가가 많거나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무력분쟁에 관여된다. 이 세 가지 변수는 국제분쟁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무력분쟁에 관여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표 IV-7〉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무력분쟁 관여 횟수 차이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6061	0.41313	1.19041	220.75	0.000	
불량국가	정치학살	176	1.61363			3.19260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388	1.84020			3.19887
모든 국가	625	0.52860	1.51914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07.

불량국가는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무력분쟁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개시하며 동시에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무력분쟁의 대상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강대국과 국력이 강한 국가가 무력분쟁을 더 많이 개시하며, 동시에 무력분쟁의 대상국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양국 간 군사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맹구조 일치도가 낮은 경우, 정치체제 상이도가 높은 경우, 근접한 경우, 무역관계가 낮은 경우에 무력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불량국가는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무력분쟁을 개시할 개연성이 높고, 동시에 무력분쟁의 대상이 될 개연성도 높다. 즉 불량국가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은 경험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불량국가와 국제사회의 관계

연구결과에 의하면, 불량국가가 정상국가보다 더 많이 협력적 신호를 보내고 있음이 드러난다. 불량국가 가운데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 또는 테러 수출국이 국제사회로 보내는 협력적 신호는 정상국가의 협력적 신호의 2배에 육박한다.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과 테러 수출국이 다른 국가에 대하여 협력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불량국가가 정상국가보다 더 많은

갈등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불량국가 가운데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 또는 테러 수출국이 국제사회로 보내는 갈등적 신호는 정상국가의 협력적 신호의 2배에 육박한다. ‘불량정권’도 정상국가에 비하여 갈등적 신호를 더 많이 보낸다.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과 테러 수출국이 다른 국가에게 갈등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표 IV-8>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협력적 신호의 사례 및 차이

(분석단위: ‘국가-월(country-month)’)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31487	4.95683	18.4536	34.61	0.000
불량국가	정치학살	384	4.41145	7.24991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1632	8.76409	12.1831		
모든 국가		33503	5.13604	18.1259		

자료: Gary King,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s(1999-2004)”(2007)
<<http://gking.harvard.edu/events>>.

<표 IV-9>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갈등적 신호의 사례 및 차이

(분석단위: ‘국가-월(country-month)’)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31487	4.88338	17.6827	49.75	0.000
불량국가	정치학살	384	5.77083	9.54333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1632	9.27757	12.7164		
모든 국가		33503	5.10760	17.4262		

자료: Gary King,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s(1999-2004)”(2007)
<<http://gking.harvard.edu/events>>.

이상의 연구결과는 두 가지로 종합된다. 첫째,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하는 ‘불량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반면, 핵무기프로그램 보유국 또는 테러 수출국은 정상국가에

비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즉, 통상적으로 알려진 불량국가와 국제사회의 갈등은 국제사회와 ‘불량정권’ 사이에 존재한다. 둘째, ‘불량정권’과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 그리고 테러 수출국은 국제사회에 대하여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한다. 이처럼 불량국가와 국제사회의 관계가 일반적인 통설과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비정상국가의 정치경제

일반적으로 비정상국가는 국제사회(international community)에서 통용되는 규범과 기준의 한계를 벗어나 있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로서 취약국가(혹은 실패국가)와 불량국가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렇지만 비정상국가에 관해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정상국의 조건을 구성하는 ‘기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량국가의 경우, 미국의 외교 정책적 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취약국가 역시 선진 원조 공여국의 자의적 정의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연구는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속성을 밝힘에 있어서 기존 연구에서 공통으로 활용되어온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가. 정치경제의 비정상성

(1) 취약국가

국가의 취약성(fragility)은 부분적 취약성에서 전반적인 붕괴내지 실패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의 취약성을 포괄한다. 따라서 취약국가의 형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취약성의 정도 또한 일률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그리고 정치학 저술에 따르면, 경제적 취약성은 국가실패의 필수적인 요인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표 IV-10> 국가 취약성의 주요 구성요소

영역	효과성	정당성
안보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범죄를 제약하기 위한 군사력 및 경찰력	합당하고 공정하며 인권을 위반하지 않는 군사력 및 경찰력
정치	시민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정치제도 및 과정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치과정과 규범 및 지도자
경제	경제성장(직업 포함)을 지원하고 경제적 변화에 적응하며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경제 및 금융제도와 인프라	접근 가능하며 합당하게 투명하고, 자연자원 접근과 관리가 가능한 경제 제도 및 금융서비스와 소득창출 기회
사회	취약 집단 및 소수 집단을 포함, 사회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	다양한 관습과 문화 및 신념체계에 대한 관용

자료: USAID, 2005, p. 4

(2) 불량국가의 경제적 측면

불량국가는 국제규범에 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테러리즘을 지원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국가로 정의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불량국가는 주로 대내적 행태에 기초하여 규정되었다. 즉 정권의 극심한 국내 행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초래한 국가들로 이해되었다. 이들의 잔학성은 대외적 행태이기보다는 대체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 의식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초부터 미국 외교정책 결정자들은 불량국가의 대외적 행태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미국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대한 직접적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 9·11 이후 미국 외교가에서 불량국가는 포스트 소비에트 안보위협과 동일시되기에 이르렀다.

나.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특징

(1) 경제지표

비정상국가는 경성개과 연성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경성개념이 근원적 기준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라면, 연성개념은 파생적 측정방법에 의해 형성된다. 전자는 개념의 지표들이 개념 자체에 담겨져 있어 이론적 추론 작업이 불필요

하다. 예를 들어, 대량살상무기의 추구나 국제규범으로부터의 이탈 행위로 정의되는 비정상국가는 경성개념에 가깝다.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금융규범의 위반 여부를 핵심 지표로 삼는다면 비정상국가는 경성개념이 된다. 반면 연성개념은 개념 자체의 구성요소와 그 결과 간의 연결이 간접적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 과정이 부가되어야 한다. 대체로 경제적 요인으로 본 비정상국가는, 비정상성 자체보다는 그 대내외적 행태에 관심을 둘 경우, 하나의 연성개념으로서 이론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1인당 GDP>

취약국가는 국가기능의 저하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근원 중 하나는 경제적 빈곤이다. 1인당 GDP가 낮을수록 내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빈곤의 결과인 낮은 기대수명도 국가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GDP 증가율>

국가의 능력과 행태는 전반적인 경제발전 수준과 함께 경제성장의 폭에 의해서도 영향 받는다. 여러 이론에 따르면, 대통령의 인기도와 군사력 사용 빈도 간에 높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곧 지도자의 인기도에 따라 대외적 무력개입 성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등 정권 형태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개방적 무역과 투자>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수출주도형 국가들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경제에의 통합 정도에 의존한다. 실패국가의 경우 국제무역에 대한 개방성이 매우 낮거나 존재하지 않으며, 삶의 질을 재는 유아사망률이 높고, 비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과의 밀접한 통합은 무력충돌과 정치적 불안정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국제경제규범 준수>

비정상국가는 거시경제적 특징과 대외적 개방성 이외에 국제경제 규범

체제 안에서도 일탈 행태를 보인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경제적 게임 규칙에서 벗어나 행동한다. 본 연구에서 글로벌 경제규범에 반하는 비정상국가의 첫째 지표는 IMF규약 제8조 상 경상계정의 태환성 수용 여부다.

(2) 비정상국가의 유형과 리스트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속성과 행동규칙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 기준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와 함께, 어떤 국가를 비정상국가로 간주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준의 선택과 가중치에 따라 비정상국가의 범주가 달라지는 자의성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보다 객관적인 비정상국가 식별을 위해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어떤 국가들이 취약국가와 불량국가로 분류되었는지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비정상국가를 35개의 취약국가, 16개의 불량국가 등 총 39개국으로 추출하였다.

<표 IV-II>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비정상국가의 유형과 리스트

취약국가 (35개국)		불량국가 (16개국)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룬디	앙골라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	부룬디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콩고	코티디부아르	에리트리아
동티모르	에리트레아	이디오피아
에티오피아	기니	이란
기니비사우	아이티	이라크
이라크	케냐	라이베리아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라위	미얀마	미얀마
네팔	니제르	북한
나이지리아	북한	상투메 프린시페
파키스탄	르완다	수단
시에라리온	솔로몬 군도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짐바브웨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다.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상호작용

(1) 속성 파라미터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파라미터는 경제발전, 경제성장, 개방경제, 그리고 규범준수 등 네 가지 지표를 통해 도출된다.

(2) 상호작용의 패턴

<비정상국가의 지리적 인접성>

많은 국제 및 비교정치 연구들은 국가의 개별적 속성들이 비정상성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규명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내적 갈등과 붕괴가 해당 국가의 특수한 속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접근법을 택했다. 국가의 비정상성은 단순히 해당 국가의 속성에 의해서만 정해지기보다 이웃국가들과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실패의 경우, 경제·사회·정치·군사적 문제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 이웃 나라와 지역 및 글로벌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실패는 또 다른 국가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인접지역으로 전염되고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비정상국가의 상호작용 파라미터>

인접국가의 경제적 지표는 대체로 비정상국가들의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지만, 글로벌 평균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상국가는 경제적 능력과 국제규범 부합도 면에서 글로벌 평균은 물론, 인접국가의 실적에도 미달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정상국가는 고립되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나쁜 이웃(bad neighbors)’과 상호작용하면서 공존해왔다. 비정상국가의 인간개발지수도 다른 저소득 국가를 포함한 표본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가의 비정상성이 단순히 소득수준의 하락뿐 아니라 인간생활의 기초적인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국제사회의 지원과 북한에 대한 함의

가. 불량국가의 정상화 과정

지난 몇 십 년 사이의 추세를 보면, 불량국가로 분류되는 국가 가운데 일부는 정상국가로 변화하기도 하지만, 정상국가 중에서도 새롭게 불량국가로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그렇다면 불량국가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정상국가로 변화하는 것일까?

(1) 불량국가의 분화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하는 정권이 정상화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불량정권’이 내부적으로 교체되는 경로이다. 보스니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르완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불량정권’이 외부의 압박으로 변화 또는 교체되는 경로이다. 유고슬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은 외부의 압박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 이라크, 우간다, 남베트남은 외부 세력에 의하여 정권이 교체되었다. 셋째, ‘불량정권’이 안정화되어 더 이상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로다. 칠레, 적도기니, 이란, 필리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하는 정권이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 또는 테러 수출국과 같이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국가가 정상화되는 과정도 국내외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외부세력에 의하여 정권이 강제로 교체되는 경로(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국제사회와 화해 이후 정권의 행동이 변화하는 경로(리비아, 북한), 내부 정권교체 이후 테러 금수와 핵무기프로그램을 폐기가 일어나는 경로(남예멘, 남아공, 루마니아, 유고),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 후 핵무기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경로(대만, 한국) 등이 존재한다. 불량국가의 분화과정에 대한 유형화가 단순하게 진행될 수 없을 만큼 그 진화과정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표 IV-12> 불량국가의 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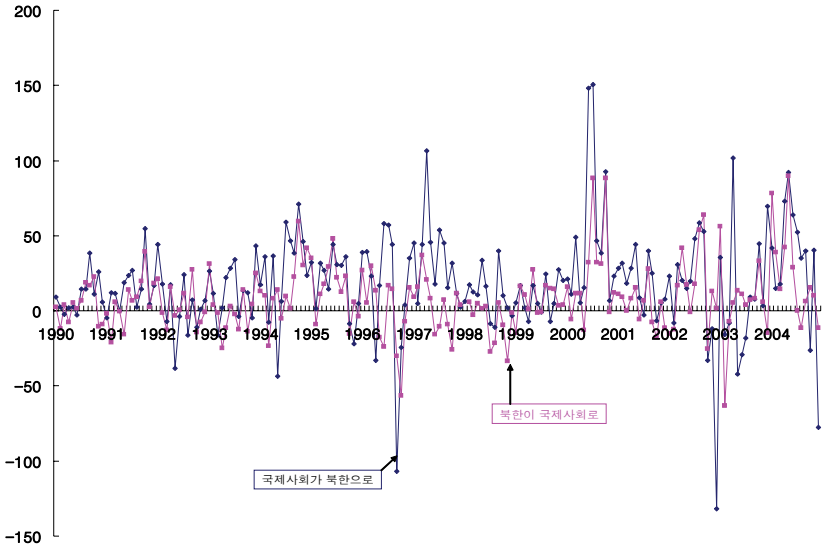
	국가	지속 여부	사유
테러 수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중단	외부세력에 의한 정권교체
	북한, 리비아	중단	미국과의 관계 개선
	예멘	중단	내부 정권교체 (통일)
	쿠바, 시리아	지속	
핵무기 프로그램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중단	내부 정권교체 (민주화)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단	적수끼리 합의
	한국, 대만	중단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
	이라크	중단	외부세력에 의한 정권교체
	리비아	중단	미국과의 관계개선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란	지속	

(2) 불량국가와 국제사회의 관계

불량국가와 국제사회 간의 관계를 추세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불량국가를 정상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수단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림 IV-2>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상호작용이 2004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음을 보인다. 이 그림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낸 신호·행동 가운데 협력적 신호의 점수에서 갈등적 신호의 점수를 감한 평화지수(‘북한이 국제사회로’)와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보낸 신호·행동 가운데 협력적 신호의 점수에서 갈등적 신호의 점수를 감한 평화지수(‘국제사회가 북한으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그림에서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2003년 초반(2차 걸프전쟁 발생 시기)과 1996년 하반기(강릉 잠수정 침투사건)을 제외하고는 좋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시기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는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2>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으로 향하는 평화지수와 북한이 국제사회로 향하는 평화지수 간 상관계수는 0.5316(p-value = 0.000)인데, 이는 양자가 상대방의 행동에 조응하여 행동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양자 행동의 조응도가 중간 정도이지만, 상대방을 향한 신호·행동의 우호성을 고려하면 그 의미가 크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인 평화지수의 평균은 18.449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보인 평화지수의 평균은 8.145이다. 북한이 미국에 의하여 악의 축으로 지목을 받던 시점과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을 제외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 우호적 입장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1993년부터 1993-4년 제1차 북핵위기사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비하면, 여전히 좋은 편이었다.

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1) 정치경제적 차원의 지원

국제사회의 비정상국가는 소득과 생활수준, 경제적 개방성, 국제규범 준수율 등의 면에서 국제적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는 국가들에서 발생한다. 이들

은 탈냉전기 내전과 테러리즘 등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 가능성 때문에 학문적, 정책적 관심사로 대두했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비정상 국가의 경제적 측면보다는 국제안보, 인도적 탄압, 인권침해 행위 등 정치군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경제적 궁핍은 국가들의 공격적 성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전쟁의 일차적 온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불량국가를 포함한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속성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비정상국가의 정치경제에 대한 이해가 북한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첫째,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은 우선 비정상국가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끝으로, 비정상국가에 대한 지원의 주체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비정상성의 지리적 확산으로 인해 지역적인 메커니즘을 통한 해결책을 추진하기 힘들다. 요컨대, 이 연구의 결과는 북한의 비정상성은 북한 중앙정부의 능력배양을 목표로 삼으면서, 하나의 고립된 대상으로 상정하되, 지역적인 접근법을 통해 그 변화를 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외교정책 및 정치군사적 차원의 지원

불량국가의 행위에 관한 경험적 분석 및 정상화 과정에 대한 검토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인과사슬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정상국가가 불량국가로 전환되는 원인은 인종갈등, 장기집권 아래서 인권탄압과 같은 국내적 요인, 적대국의 존재와 안보위협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불량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부분적으로 맞서려는 성향을 보인다. 셋째, 불량국가가 국제사회의 압박에 맞설 경우, 국제사회와 불량국가 간의 상호작용에서 국제사회의 우호적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관여(engagement) 정책과 봉쇄(containment)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유형의 외교정책을 적절하게 혼합한 대응방안이야말로 북한과 같이 다루기 힘든 불량국가 및 취약국가, 또는 실패국가들에 대한 최선의 해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3)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위한 실천방안

이상과 같은 가이드라인은 국제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인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하여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일반화의 어려움과 위험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과 진단에 대하여 지나친 확대 해석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은 향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및 실천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북한의 경우에는 국가의 ‘취약성’보다는 ‘불량’ 속성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측면보다는 군사 및 외교안보적 측면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경제적 지원이나 교류방안보다는 외교관계 및 국제기구에서의 소통 등 정치적 대화 및 안보조치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들은 기존에도 자주 활용되는 정책수단들이지만,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취약국가 및 불량국가가 보여준 행태와 그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도 균형 잡힌 대응책을 항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인접국가 효과가 다른 취약국가 또는 불량국가에 비해 덜 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지리적 인접성은 큰 변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유사한 국내정치 및 경제적 속성을 지닌 국가들 사이에 연대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입신호(input signals)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내보내는 산출신호(output signals)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중국·한국 등 주변 국가들에 대해 제시하는 메시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을 하나의 ‘특수한’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 국제사회에서 자주 관찰되는 ‘패턴’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곧 북한을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불량국가나 취약국가처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고유한 속성을 지닌 북한’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보다 효율적이면서 의미있는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정책적 고려사항**



제5장

결론: 정책적 고려사항

북한은 2010년 9월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화한 이후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한 각종 상징조작에 매진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핵심적인 목표는 3대 세습체제의 기반구축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김정일 정권은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결과로 이러한 무력도발을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외부에서 볼 때 북한의 무력도발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국가, 불량국가의 행태인 것이다.

한국 안보의 일차적인 위협대상임과 동시에 통일의 대상인 북한은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체제이다. 이러한 북한을 정상국가로 전환되도록 외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공허한 논의일 수 있으나, 북한의 미래는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야별로 제시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남북관계 현실에 적용하여 추출한 당면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정권은 2010년에 들어 2차례의 대남 무력도발을 자행했는 바, 우선적으로 한국은 안보태세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안보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라는 북한의 실체를 무시하고 한국이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의 대북전략 기조를 ‘강경과 유화의 병행’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강경과 유화의 병행은 북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사안은 적극 제기하고,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관계 현안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에게 시인·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제공할 수도 있다.

셋째, 북한에 외부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정상국가화의 주체는 최고지도자, 권력엘리트, 주민이다. 그러나 그 어느 주체도 변화의 주동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고지도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익체를 변화시킬 리가 없고, 권력엘리트들은 스스로 복종자가 되든지 아니면 강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주민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북한변화의 주체는 누가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외부의 선진된 민주세력뿐이다. 북한 정치의 비민주성을 교정시킬 수 있는 힘은 한국을 비롯한 선진자유주의 바람뿐이다. 이러한 힘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유입되었을 때만 북한에 변화의 맹아가 싹틀 것이다. 그렇다고 외부의 힘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더욱 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힘은 간접적이고 지원적인 형태가 되고 직접적인 힘은 북한 내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외부의 힘이 북한 내에 유입되어 이를 토대로 북한 내에서 자생적인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생성되어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외부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추진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이 북한 주민을 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파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대남 적대감을 불식시키는 노력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 주민은 체제변화의 주체 가운데 하나임과 동시에 한반도 통일은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사회통합을 통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의 시장 확산은 체제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핵심요인이라는 점과 한국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분야는 경제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남북관계 현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진전이 있고, 남북 대결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한국으로서는 남북한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은 안보태세 재정립, 북한 핵문제 해결, 북한의 체제변화 등을 위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보다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전략적·현실적 이유에서 중국으로 경도

되고 있지만, 북한의 미래는 중국 사례로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불편하게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한국은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중국간 밀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는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되, 주변국과의 협력이 원활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들과 연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가능성이 큰 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비정상성’을 통해 국제사회에 전달하려는 요구사항과 메시지, 즉 ‘신호(signals)’가 무엇인지를 국제공조를 통해 파악하여 합의를 도출한 후,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끝으로 한국의 효율적인 대북·통일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대북·통일전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불협화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북한 변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지난한 과정이고 장시간의 인고와 인내가 있어야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고재홍.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3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김갑식. 『김정일정권의 권력구조』.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 김석진. 『개발원조의 국제규범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서울: 산업연구원, 2009
- 김용운. 『카오스의 날갯짓』. 서울: 김영사, 1999.
-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 평양: 평양출판사, 2003.
-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휘방은 허용될 수 없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 김학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린즈, J. & 스테판·김유남·이충묵·주미영·안순철·이상환. 『민주화의 이론과 사례: 이상과 현실의 갈등』. 서울: 삼영사, 1999.
- 림이철·최금룡. 『선군조선의 오늘』. 평양: 평양출판사, 2007.
- 민병원·김창욱 편. 『복잡계 워크숍』.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민병원·조동준·김치욱.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민병원. 『복잡계로 풀어내는 국제정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 박형중·조한범·장용석.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박홍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9.
-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계』. 서울: 지평, 1989.
-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서울: 백산서당, 1989.

- 안드레이 란코프. 『북한 워크아웃』. 서울: 시대정신, 2009.
-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서울: 한울, 2010.
- 양창삼. 『조직혁신과 창조적 경영』. 서울: 민영사, 1997.
- 윤영수·채승병.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_____.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_____.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_____. 『북한의 후계자론』.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이석·김창욱·양문수·이석기·김은영.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이우영 외. 『북한주민 인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8.
- 인민과학사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해설』. 평양: 인민과학사, 1973.
- 임강택·이석기·이영훈·임을출. 『2009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0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임수호·동용승.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의의와 가능성』.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7.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임혁백. 『시장·국가·민주주의: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서울: 나남출판, 1994.
- 전현준 외.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제7권』.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조영남. 『중국 정치개혁과 전국인대』. 서울: 나남출판, 2000.
-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존 루이스 개디스. 『역사의 풍경』. 서울: 에코리브르, 2004.
- 최완규 역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울, 2001.
- 최진욱 외.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프리츠프 카프라 지음. 김용정·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 서울: 범양사출판부, 1998.
- 호혜일. 『북한 요지경』. 서울: 맑은소리, 2006.
-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서울: 통일정책연구소, 1998.
- Amin, Samir.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A Critique of the Theory of Underdevelopment*.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4.
- Bates, Robert H. *When Things Fell Apart: State Failure in Late Century Af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Bertsch, Gary K. *Comparing Political Systems: Power and Policy in Three World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8.
- Bruce Bueno de Mesquita. *The Predictioneer's Game*. 김병화 역. 『프리딕셔니어』.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0.
- Cardozo, Fernando and Enzo Falleto.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 Frank, Andre Gunder.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67.
- Friedrich, Carl J.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 Fund for Peace. *Threat Convergence: New Pathways to Proliferation?*

- Washington, DC: Fund for Peace, 2006.
- Ghani, Ashraf and Clare Lockhart. *Fixing Failed States: A Framework for Rebuilding a Fractured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Heston, Alan, Robert Summers and Bettina Aten. *Penn World Table Version 6.3*. Center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Production, Income and Prices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9.
- IAEA. *Illicit Trafficking Database*. Vienna: IAEA, 2006.
- Klare, Michael. *Rogue States and Nuclear Outlaws: America's Search for a New Foreign Policy*. New York, NY: Hills & Wang, 1995.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Linz, Juan J.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 Marshall, Monty G and Benjamin R. Cole. *Global Report 2009: Conflict, Governance, and State Fragility*. Center for Systemic Peace. George Mason University, 2009
- Marshall, Monty G. and Jack Goldstone. *Global Report on Conflict, Governance, and State Fragility: Gauging System Performance and Fragility in the Globalization Era*. Center for Systemic Peace. George Mason University, 2007
- Merill, John. "North Korea's Halting Effort at Economic Reform." in Chong-Sik Lee and Se-Hee Yoo (eds.). *North Korea in Transition*.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1.
- Miller, John H. and Page, Scott E. *Complex Adaptive Systems: an*

- introduction to computational models of social lif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 Moore, Barrington, Jr. *The Social Origins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Boston: Beacon Press, 1996.
- Nincic, Miroslav. *Renegade Regimes: Confronting Deviant Behavior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 OECD.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Paris: OECD, 2005.
- Ota Sik, Marianne Grund Friedkerg (trans.). *The Communist Power System*. New York: Praeger, 1981.
- Ota Sik, Marianne Grund Friedkerg (trans.). *The Communist Power System*. New York: Praeger, 1981.
- Rice, Susan E., and Stewart Patrick. *Index of State Weakness in the Developing World*.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007.
- Rotberg, Robert I. ed. *When States Fail: Causes and Consequen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Russett, Bruce and John Oneal.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W.W. Norton, 2001.
- Russett, Bruce. *Controlling the Sword: The Democratic Governance of National Secur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Russett, Bruce.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Simmer, Raymond. *Rogue Regimes: Terrorism and Prolifer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 Skocpol, Theda.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US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n the Bottom-Up Review*.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1993.

US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Volume II: Money Laundering and Financial Crimes*. Washington, DC: Bu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 2009.

USAID. *Fragile States Strategy*. Washington, DC: USAID, 2005.

_____. *Measuring Fragility: Indicators and Methods for Rating State Performance*. Washington, DC: USAID, 2005.

World Bank. “World Bank Group Work in Low Income Countries under Stress: A Task Force Report.” World Bank, 2002.

World Bank. *Good Practice Note for Development Policy Lending Development Policy Operations and Program Conditionality in Fragile States*. Washington, DC: World Bank, 2005.

_____. *Engaging With Fragile States: An IEG Review of World Bank Support to Low-Income Countries Under Stress*. Washington, DC: World Bank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2006.

Zartman, I. William. ed. *Collapsed States: The Disintegration and Restoration of Legitimate Authority*. Boulder: Lynne Rienner, 1995.

2. 논문

권영경. “2012년 체제’ 구축전략과 북한경제의 변화.” 『북한경제리뷰』. 2010년 3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0.

김갑식·오유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사회에서 나타난 의식의 단층.”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2호, 2004.

김갑식·이무철. “북한 내각의 경제적 역할과 당정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3호, 2006.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북한연구』. 제8권 1호, 2005.

- _____. “북한 ‘조선로동당대표사회’ 개최 결과와 향후 전망.” 『이슈와 논점』. 126호, 2010.10.4.
- _____.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특징과 한계 그리고 전망,” 『현대북한연구』. 제10권 3호, 2007.
- _____. “1990년대 북한의 지방정치: 당사업체제의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 김병연. “북한경제의 시장화.” 윤영관·양운철 편집.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경제와 사회』. 파주: 한울, 2009.
- 김석진. “개발원조의 국제규범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09-106, 2009.
- 김양환. “로동계급의 당의 본질과 사회주의 정치기구체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주체의 리론.” 『철학연구』. 4호, 1990.
- 김영중. “사회주의 국가의 관료제 연구.” 『북한연구』. 겨울호, 1991.
- 김용현. “북한 군사국가화의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1호, 2003.
- 김은정. “총서 《불명의 향도》 『강계정신』에 나타난 고난의 일상화와 희생의 양상.” 『국제어문』. 제42집, 2008.
- 김일성. “당 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혁명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 (1994.1.1)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일군들은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자.”(1992.12.28) 『김일성 저작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____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지방예산수입을 더욱 늘일데 대하여(1978년 4월 11일).” 『김일성저작집 3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김재홍. “김정일 체제의 통치이념과 권력실세들.” 『신동아』. 7월호, 1998.
- 김정일.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당 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혁명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 (1994.1.1)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김창욱·윤영수. “복잡계이론에서 예측·통제·적응의 문제.” 복잡계 네트워크 저. 『복잡계 워크샵』.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김창호.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입니다.” 『역사과학』. 4호, 1997.
- 김형원. “당의 령도는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 『근로자』. 8호, 1986.
- 노귀남. “북한 여성의 의식 변화와 평화소통의 길.”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2010년 만해축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 8. 12.
- 리팔롬바라. “침투: 정부능력의 위기.” 민준기·신정현 공역. 『근대화와 정치 발전: 정치위기의 극복』. 서울: 법문사, 1974.
- 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활로를 열어주신 불멸의 공헌.” 『경제연구』. 1호, 2004.
- 림정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독창적 사상.” 『철학연구』. 4호, 1988.
-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3호, 2009.
- _____. “북한 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 시장의 자기조직화 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9권 3호, 2010.
- 박형중. “다층집권체제로서의 북한의 정치체제: 중국 및 소련과의 비교.”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1호, 2008.
- 스즈끼 마사유키.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 서울: 동화연구소, 1991.
- 안연옥. “북한을 흔드는 자본주의 ‘노랑물’.” 『북한사회』. 10월호, 2008.
-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2권 2호, 2005.

- _____. “시장 억제 정책기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함의 (2007~09년).” 제2회 KDI 북한경제연구포럼 발표 논문집, 2010.
- 오일환. “김정일시대의 북한체제 현황.” 『현대북한체제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0.
- 이광모·장순희. “복잡성이론의 적실성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2004.
- 이대근. “조선로동당의 조직체계.”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이석.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 『KDI 현안분석』. 2010.5.24.
- 이석호.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군의 역할.”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이영훈. “농민시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경제』. 파주: 한울, 2005.
- _____.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2005년 하반기호 통권 제44호, 2005.
- 이정철. “북한의 경제법제와 거시경제정책의 이중성: 중국과 베트남 경제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9권 1호, 2010.
- 임수호·동용승.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의의와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7. 8.
- 임수호. “김정일 정권 10년의 대내 경제정책 평가: ‘선군경제노선’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여름호, 2009.
- 임수호.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대내경제전략.” 『북한경제리뷰』. 2010년 3월호, 2010.
- 장덕진·임동균. “복잡계와 사회구조.” 복잡계 네트워크 저. 『복잡계 워크샵』.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정명호·장승권. “경영의 복잡성과 복잡성의 경영.” 삼성경제연구소 편. 『복잡성 과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 정성임. “서장.”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 정영철. “북한사회통제 메커니즘의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9권 2호, 1997.

-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발전 동인에 관한 연구.” 『한반도의 장벽을 넘어』. 2010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봄 학술회의 자료집, 2010.6.9.
- 존 밀러. “소련 공산당: 동향과 문제점.” 도성달·이명남 공역. 『비교공산주의 정치론: 그 변화와 전망』. 부천: 인간사랑, 1990.
- 차문석. “북한 경제의 동학과 잉여의 동선 - 특권경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1호, 2009.
- _____.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담론201』. 10권 2호, 2007.
-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6.
- 최중극.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사상리론은 주체의 혁명위업승리를 담보하는 위대한 학설.” 『경제연구』. 2호, 1995.
- 최창현. “복잡계와 행정조직.” 복잡계 네트워크 저. 『복잡계 워크샵』.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최창현. “복잡성이론의 조직관리적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행정학보』. 제33권 4호, 1999.
- 최현배. “주체의 군건설의 기초와 기본핵.” 『철학연구』. 2호, 1989.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한호석. “항쟁업류의 주체철학 해석에 대한 북(조선) 내부의 비판.” 『통일논의』. 22호, 1998.
- 현성일. “북한 노동당의 조직구조와 사회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서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Kim, Kap-Sik. “Suryong’s direct rule and the political regime in North Korea under Kim Jong Il.” *Asian perspective*. Vol. 32, No. 3, 2008.

Bates, Robert H. *When Things Fell Apart: State Failure in Late*

- Century Af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Batt, Judy et al. "Foreign Policy Ideology." in Gerald Segal, ed. *Openness and Foreign Policy Reform in Communist States*. London: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2.
- Bearce, David H. and Sawa Omori. "How Do Commercial Institutions Promote Pea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2, No. 6, 2005.
- Beck, Nathaniel K. Gleditsch, and K. Beardsley. "Space is More Than Geography: Using Spatial Econometrics in the Study of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0, No. 1, 2006.
- Broome, Andre. "Global Economic Norms and Renegade Regim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New York, February 14-16, 2009.
- Buhaug, Halvard and Kristian Skrede Gleditsch. "Contagion or Confusion? Why Conflicts Cluster in Spa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2, 2008.
- Burt, Richard.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 Spread of New Conventional Weapons Technology." *International Security*. Vol. 1, No. 3, 1977.
- Caprioli, Mary and Peter F. Trumbore. "Identifying 'Rogue' States and Testing their Interstate Conflict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9, No. 3, 2003.
- Caprioli, Mary and Peter F. Trumbore. "Rhetoric versus Reality: Rogue States in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9, No. 5, 2005.
- Carment, David, Stewart Prest, and Yiagadeesen Samy. "Determinants of State Fragility and Implications for Aid Allocation: An Assessment Based on the Country Indicators for Foreign Policy Project." UNU-WIDER Research Paper No. 2008/46,

- 2008.
- Chestnut, Sheena. "Illicit Activity and Proliferation: North Korean Smuggling Net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1, 2007.
- Collier, Paul and Anke Hoeffler. "Greed and Grievance in Civil War." *Oxford Economic Papers*. Vol. 56, No. 4, 2004.
- Coyne, C. J. "Reconstructing Weak and Failed States: Foreign Intervention and the Nirvana Fallacy." *Foreign Policy Analysis*. Vol. 2, 2006.
- DeMelo, Martha·Denizer, Cevdet·Gelb, Alan·Tenev, Stoyan. "Circumstance and Choice: The Role of Initial Conditions and Policies in Transition Econom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October 1997.
- Dunn, Lewis A. "Nuclear Gray Marketeering." *International Security*. Vol. 1, No. 3 (1977).
- Esty, Daniel C. Jack A. Goldstone, Ted Robert Gurr, Barbara Harff, Marc Levy, Geoffrey D. Dabelko, Pamela T. Surko, and Alan N. Unger. "State Failure Task Force Report: Phase II Findings," 1998.
- Fearon, James D. and David D. Laitin. "Ethnicity, Insurgency, and Civil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7, No. 1, 2003.
- Freedman, Lawrence. "British Foreign Policy to 1985: IV. Britain and the Arms Trade." *International Affairs*. Vol. 54, No. 3, 1978.
- Fund for Peace. *Threat Convergence: New Pathways to Proliferation?* Washington, DC: Fund for Peace, 2006.
- Gartzke Erik. "The Capitalist Pe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1, No. 1, 2007.
- Gartzke, Erik and Quan Li. "The Shadow of the Invisible Hand: War, Peace, and Economic Globaliz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7, 2003.

- Gartzke, Erik, Quan Li, and Charles Bohemer. "Investing in the Peace: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5, No. 2, 2001.
- Harkavy, Robert E. "Pariah States and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5, No. 1, 1981.
- Henriksen, Thomas H. "The Rise and Decline of Rogue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4, No. 2, 2001.
- Heston, Alan, Robert Summers and Bettina Aten. *Penn World Table Version 6.3*. Center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Production, Income and Prices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9.
- Hopf, Ted. "The Promise of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1, 1998.
- Hoyt, Paul. "The 'Rogue State' Image in American Foreign Policy." *Global Society*. Vol. 14, 2000.
- Huber, Evelyne, Dietrich Rueschmeyer, and John D. Stephens. "The Impact of Economic Development on Democrac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7, No. 3, 1993.
- IAEA. *Illicit Trafficking Database*. Vienna: IAEA, 2006.
- Iqbal, Zaryab and Harvey Starr. "Bad Neighbors: Failed States and Their Consequenc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5, 2008.
- Kasfir, Nelson. "Domestic Anarchy, Security Dilemmas and Violent Predation: Causes of Failure." in Robert I. Rotberg. ed. *When States Fail: Causes and Consequen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Klare, Michael T. "The Deadly Connection: Paramilitary Bands, Small Arms Diffusion, and State Failure." in Robert I. Rotberg. ed. *When States Fail: Causes and Consequen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Lasswell, Harold. "The Garrison State and Specialists on Violence."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46, January 1941.
- Lipset, Seymour Martin.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3, No. 1, 1959.
- Londregan, John B. and Keith T. Poole. "Poverty, the Coup Trap, and the Seizure of Executive Power." *World Politics*. Vol. 42, 1990.
- Marshall, Monty G. and Jack Goldstone. *Global Report on Conflict, Governance, and State Fragility: Gauging System Performance and Fragility in the Globalization Era*. Center for Systemic Peace. George Mason University, 2007.
- Miller, Ross A. "Domestic Structures and the Diversionary Use of For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9, No. 3, 1995.
- Most, Benjamin A. and Harvey Starr. "Theoretical and Logical Issue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Diffusion."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Vol. 2, No. 4, 1980.
- Newman, Edward. "Weak States, State Failure, and Terrorism."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Vol. 19, 2007.
- O'Loughlin, John and Frank Witmer. "Taking Geography Seriously: Disaggregating the Study of Civil War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Disaggregating the Study of Civil War and Transnational Viol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La Jolla, CA., March 6-8, 2005.
- O'Reilly, K. P. "Perceiving Rogue States: The Use of the 'Rogue State' Concept by U.S Foreign Policy Elites." *Foreign Policy Analysis*. Vol. 3, 2007.
- OECD.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Paris: OECD, 2005.
- Ohlson, Thomas. "Understanding Causes of War and Peace." *European*

-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4, No. 1, 2008.
- Oliver, Michael J. "Civilizing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s." in Brett Bowden and Leonard Seabrooke. ed. *Global Standards of Market Civilization*. London: Routledge, 2006.
- Oneal, John R. "Measuring Interdependence and Its Pacific Benefits: A Reply to Gartzke and Li."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0, No. 6, 2003.
- Oneal, John R. and Bruce Russett. "The Kantian Peace: The Pacific Benefits of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885-1992." *World Politics*. Vol. 52, No. 1, 1999.
- Oneal, John R., Frances H. Oneal, Zeev Maoz, and Bruce Russett. "The Liberal Peace: Interdependence, Democracy, and International Conflict, 1950-85."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3, No. 1, 1996.
- Ostrom, Charles, and Brian Job. "The President and the Political Use of For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1986.
- Patrick, Stewart. "'Failed' States and Global Security: Empirical Questions and Policy Dilemma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9, No. 4, 2007.
- Political Instability Task Force. "Genocide and Politicide." *State Failure Problem Set: International Wars and Failure Governance, 1955-2009*. 2010.
- Popov, Vladimir. "Shock Therapy Versus Gradualism: The End of the Debate (Explaining the Magnitude of Transformational Recession)."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42, No. 1. 2000.
- Przeworski, Adam and Fernando Limongi. "Modernization: Theory and Facts." *World Politics*. Vol. 49, No. 2, 1997.
- Przeworski, Adam. "Games of Transition." Unpublished Paper, 1990.
- Rice, Susan E., and Stewart Patrick. *Index of State Weakness in the*

- Developing World*.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007.
- Rotberg, Robert I. “The New Nature of Nation-State Failure.” *Washington Quarterly*. Vol. 25, No. 3, 2002.
- Russett, Bruce and John Oneal.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W.W. Norton, 2001.
- Russett, Bruce. *Controlling the Sword: The Democratic Governance of National Secur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Russett, Bruce.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Sambanis, Nicholas. “A Review of 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in the Quantitative Literature on Civil War.” *Defence and Peace Economics*. Vol. 13, No. 3, 2002.
- Simmer, Raymond. *Rogue Regimes: Terrorism and Prolifer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 Simmons, Beth and Z. Elkins. “The Globalization of Liberalization: Policy Diffusion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8, No. 1, 2004.
- Skocpol, Theda.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Sztompka, Piotr. “Looking Back: the Year 1989 as a Cultural and Civilizational Break.”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9, No. 2, 1996.
- US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n the Bottom-Up Review*.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1993.
- US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Volume II: Money Laundering and Financial Crimes*. Washington, DC: Bu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 Enforcement Affairs, 2009.
- Ward, Michael D., and Kristian S. Gleditsch. “Location, Location, Location: An MCMC Approach to Modeling the Spatial Context of War and Peace.” *Political Analysis*. Vol. 10, No. 3, 2002.
- Weiner, Myron. “Bad Neighbors, Bad Neighborhoods: An Inquiry into the Causes of Refugee Flow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1, 1996.
- World Bank. “World Bank Group Work in Low Income Countries under Stress: A Task Force Report.” World Bank, 2002.
- World Bank. *Engaging With Fragile States: An IEG Review of World Bank Support to Low-Income Countries Under Stress*. Washington, DC: World Bank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2006.
- World Bank. *Good Practice Note for Development Policy Lending Development Policy Operations and Program Conditionality in Fragile States*. Washington, DC: World Bank, 2005.
- Wyler, Liana Sun, and Dick K. Nanto. “North Korean Crime-for-Profit Activities.” CRS Report for Congress RL33885. Washington, DC: GPO, 2008.
- Wyler, Liana Sun. “Weak and Failing States: Evolving Security Threats and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RL34252. August 28, 2008.
- Zartman, I. William. ed. *Collapsed States: The Disintegration and Restoration of Legitimate Authority*. Boulder: Lynne Rienner, 1995.

3. 기타자료

위키백과.

임진강 출판사. 『임진강』.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DailyNK』.

『로동신문』.

『북한사회』.

『북한』.

『신동아』.

『연합뉴스』.

『열린북한방송』.

『월간조선』.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윤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성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근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합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공저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기 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C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근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공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근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월간 북한동향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Studies Series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기 타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